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경제大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2010.2.24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진행순서

1부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 축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국회의원)■ 주제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오석 (KDI 원장)■ 지정토론<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인철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개 회 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수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입니다.

바쁜 임시국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후배 국회의원님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토론회의 발제를 기꺼이 맡아 주신 현오석 KDI원장님과 토론자로 나서 주신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님, 한국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님,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님,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실장님,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김인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째가 되었습니다.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200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화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정책방향성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2월 18일)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께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중도실용’의 가치선택에 대한 긍정적 평가(61.7%)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52.3%)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외에,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항목들은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노력(긍정 60.1% vs 부정 39.9%)>, <대통령의 경제외교활동(긍정 76.3% vs 부정 23.7%)>, <부동산 정책

(긍정 58.3% vs 부정 41.6%), 〈물가안정 정책(긍정 56.3% vs 부정 43.6%)〉, 〈투자활성화 정책(긍정 59.4% vs 부정 40.6%)〉, 〈중소기업지원정책(긍정 64.0% vs 부정 36.0%)〉 등인 반면, 〈고용안정 정책(긍정 47.8% vs 부정 52.2%)〉에서만 유일하게 부정적 평가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MB정부는 위급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정책결정과 함께 세계최고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위기의 불씨가 모두 사그라진 것이 아니며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률’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등 고용안정 정책(46.1%)’을 꼽을 만큼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선제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내수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환율·금융·산업·노동 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조합들이 조화롭게 조정·변화 할 때 가능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편,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분배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의 개편과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이 향후 정부가 고심해야 할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려운 과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Oil Shock)와 IMF외환위기를 능히 극복한 우리 국민들의 놀랄만한 역량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단편적인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을 넘어,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 수 희

축 사



한 나 라 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여의도연구소 창립 15주년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소중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끌며 정당연구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여의도연구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 훌륭한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수희 소장님과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은 도전과 응전, 위기와 극복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예고 없이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시다만, 정부의 선도적 리더십과 온 국민의 하나 된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온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반환점인 2010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승승장구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마는가가 올 한 해 동안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녹색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을 꼼꼼히 되짚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어떤 것부터 시급하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은 이명박 정부 집권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알찬 결실 맺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축 사



기 획 재 정 부
장관 윤 증 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주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 2년의 평가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적 소명을 맡긴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동안 약화되어온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라는 기대와 희망이 모여서 MB호를 출범시켰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MB호의 깃발에는 시장경제원리로 대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며,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경제논리를 우선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중도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개방을 확대하고 법질서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수주,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이 과연 가능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고는 지난 2년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2008년 10월 워싱턴의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수(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인류문명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선비는 목숨을 던져야 한다는 見危授命의 자세를 숭선수범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책면에서는 갑자기 밀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청년인턴 및 희망근로사업, 미소금융,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목소리와 역할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을 둘러싸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등 미래대비 노력을 병행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일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향후 과제

세계경제가 (-)성장을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경제성적표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 갈 길이 멀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윤리적, 정신적 토대가 없이는 결국 천민자본주의의 나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부문도 재정건전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와 환경, 에너지의 시대인 21세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의 규칙을 따라가던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는 나라, 녹색성장이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여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선수들을 보더라도 긍정적 마음가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을 통해 보듯이 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선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합심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축 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 식

존경하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님들과 내빈 여러분!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과 제언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여의도 연구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주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큰 여망과 기대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왑과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 통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었으며 공장 신·증설 등의 입지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 5년, 10년 후에도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썼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있으며

세계상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출규모 세계 9위를 이루었고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SEAN과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 FTA협정, 인도와의 CEPA 협정을 각각 발효시키고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불황의 늪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또한 저조한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관계와 노동운동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일 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와 노사문화가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법질서 준수와 상호 신뢰를 높이는 일 그리고 복지와 성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가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느냐도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경쟁은 매우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낮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과 기술, 인력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조세분야도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높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율의 인하 등 세계 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바라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대토론회가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연구소의 창립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 식



목 차

발제문 Ⅱ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15 - 현 오 석 (KDI 원장)
토론문 Ⅱ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69 - 원 윤 희 (한국조세연구원장)
	■ 서민복지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75 -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금번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응 및 과제 91 -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장)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117 - 정 기 영 (삼성경제연구소장)
	■ 우리경제의 성과와 과제 123 - 허 찬 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131 - 김 종 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139 - 김 인 철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현 오 석
(KDI 원장)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현오석

Korea's Leading Think Tank



C O N T E N T S

- I. 우리 경제의 현황과 도전과제
- II. 최근 우리 경제 상황
- III. 우리 경제 전망
- IV. 정책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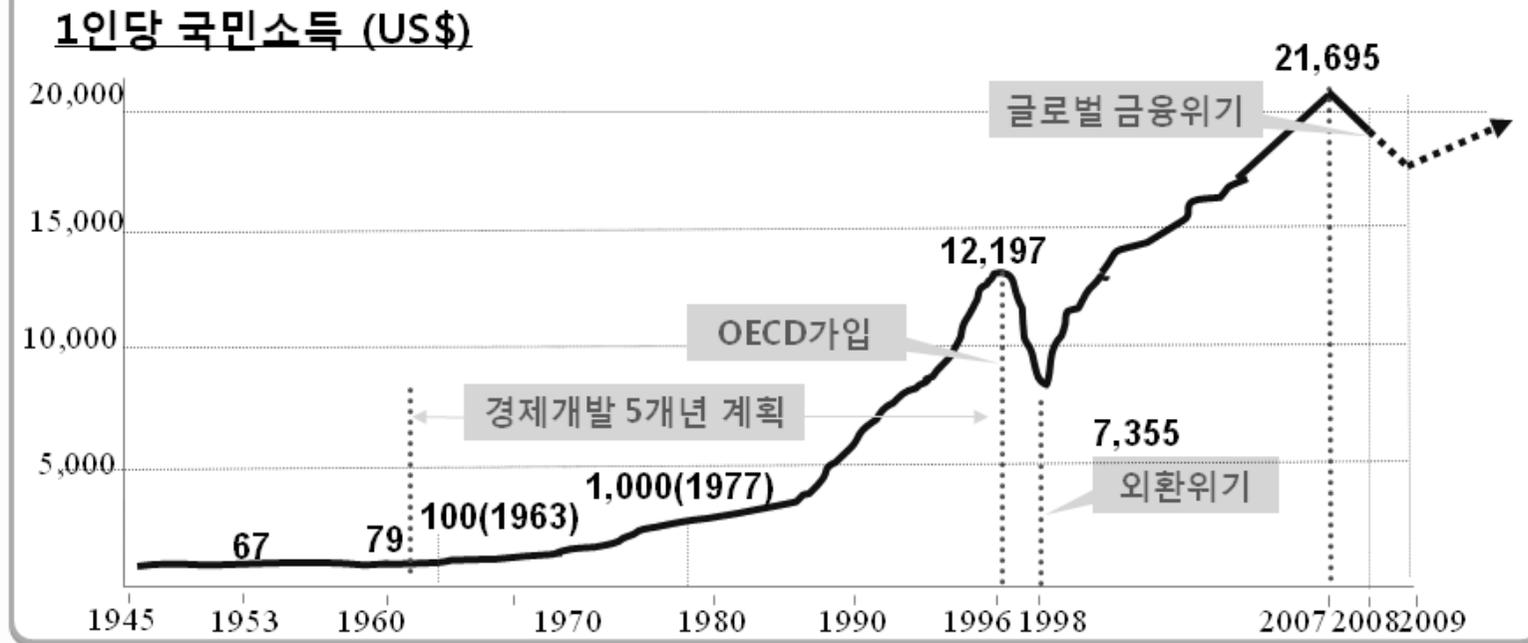
I. 우리 경제의 현황과 도전과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시장경제 기반 마련 [KDI]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①제조업과 수출 주도형 성장,
②숙련인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

- 협소한 내수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의 한계 극복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주의' 를 발전



1998-2007의 거시경제 (1)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성장세가 급속히 위축되고, 대외 충격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노출

-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중반 연평균 7.7%에서 지난 10년간 4.4%로 둔화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면서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확대

성장률 및 소비·투자 증가 추이(% , %p, 연평균)

	성장률	내수 증가 추이(%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1988~1997년	7.7	7.7(4.4)	10.4(1.3)	11.2(2.2)	11.2(2.5)
1998~2007년	4.4	3.5(1.9)	5.2(0.3)	0.7(0.1)	1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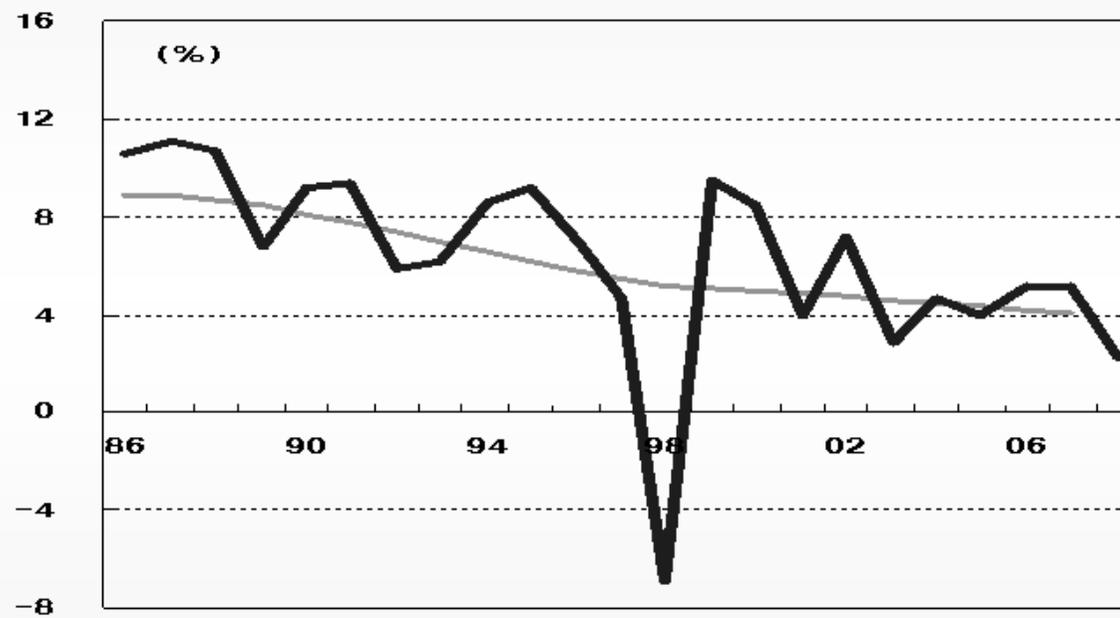
주: ()는 성장기여도(%p)

1998-2007의 거시경제 (2)



투자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장기 경기 침체 유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



1998-2007의 거시경제 (3)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세 지속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세 추이(% , 연평균)

	소비자물가	부동산가격	
		전국 주택 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
1988~1997년	6.2	4.0	6.7
1998~2007년	3.2	3.7	6.0

성장 및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둔화로 인해 신규 일자리 규모가 급락

- 연간 40-50만개에 이르던 신규 일자리 규모가 지난 10년간 20만명대 초반으로 크게 위축

구조적 문제의 누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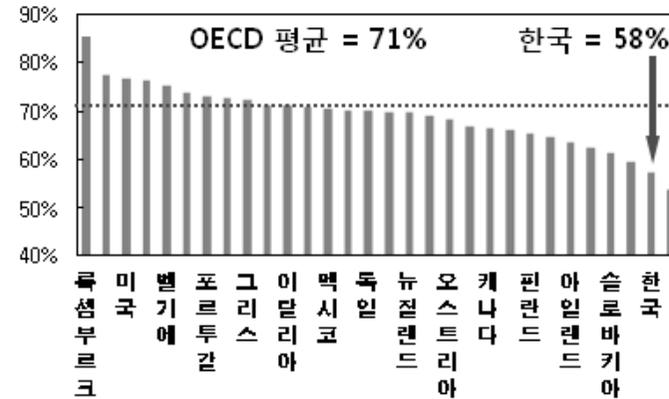


경제 역동성 저하와 고용창출기반 약화

-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추세
-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부문이 취약
→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 약화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 00)18.1→(' 07)13.9

GDP 중 서비스산업 비중('06년)



내수 및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 과당경쟁형 서비스 :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자영업
- 진입제한형 서비스 : 법률, 의료, 회계, 금융, 교육

구조적 문제의 누적 (2)

높은 대외의존도와 경제 취약요인

- 내수가 취약하여 외부충격 발생시 국내경제가 크게 변동
→ 내수와 수출의 동반 확대 필요
- * 대외의존도(%): ('90) 51 → ('00) 65 → ('08) 92
- 가계, 기업 부채 등 건전성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성장 둔화 불가피
- * 세계최저 출산율(1.19명, '08년), 가장 빠른 고령화
- 자원확보 경쟁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규제의 강화 예상

구조적 문제의 누적 (3)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 → 질적 성장기반 강화 필요

- 투자부진 등 경제활력이 낮아지고 생산성증가는 지체
- 수출·제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 저비용 신흥국 부상으로 경쟁력 잠식
생산성 비교(한국=100, '96~'06년) : (미국)190, (일본)136, (영국)138, (독일)147
- 내수·서비스부문의 취약성으로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기반 미흡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으나 시장소득의 격차확대를 보완하는데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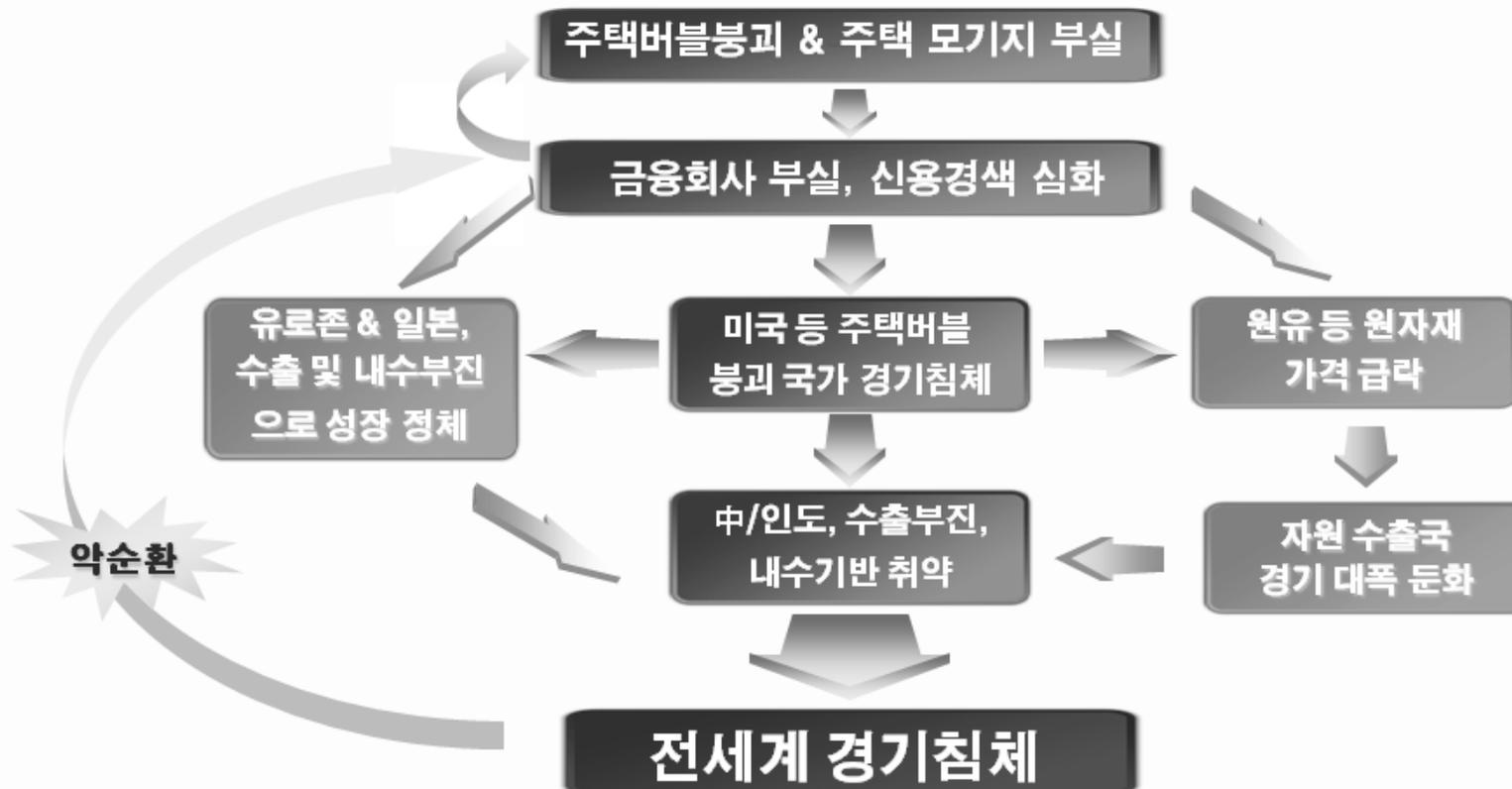
집단이기주의 등 '후진적 의식·문화·관행' 이 잔존

II. 최근 우리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위기 : 금융부실과 경기침체 악순환

KDI

신용경색 → 세계 경기침체 → 금융부실 심화' 악순환



국제 금융시장 불안



미국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글로벌 주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

* 07년말 대비 주가하락률(%) (DOW) -22% (NIKKEI) -33% (KOSPI) -15%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 지연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2.18	07년말 대비
미국 DJIA	12,463	13,265	8,776	10,428	10,393	-21.7%
일본 Nikkei225	17,226	15,308	8,860	10,546	10,336	-32.5%
엔/달러	116.3	117.8	103.3	92.1	90.9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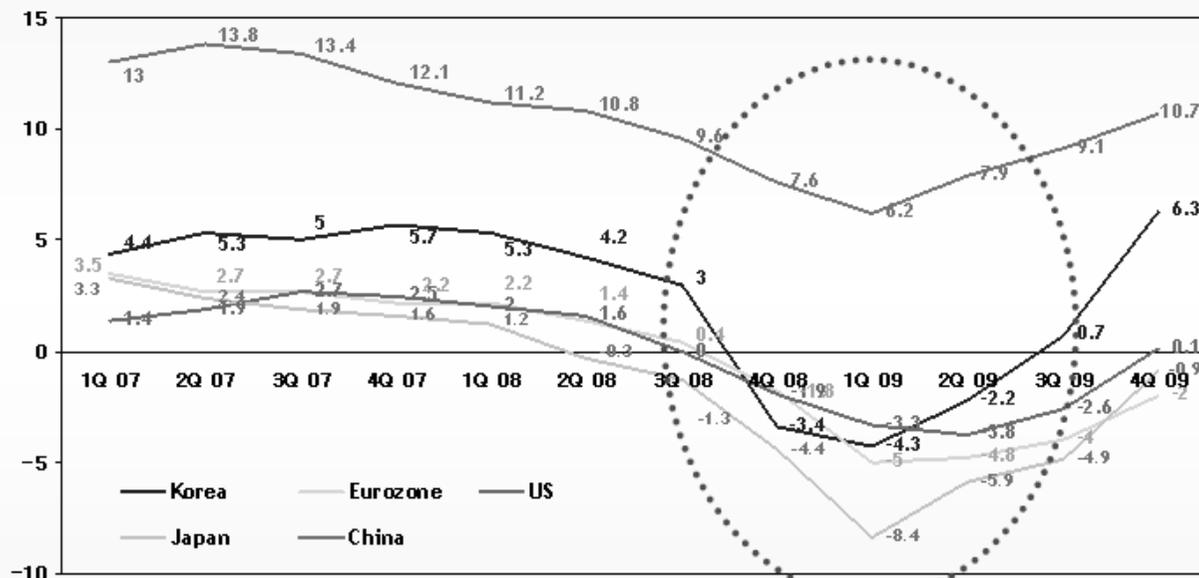
→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충격,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에 의한 2차 충격, 증시하락에 의한 자산효과 라는 3차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 지속

세계경기 침체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도 크게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

분기별 GDP 성장률



자료: Global Insight

교역경로를 통해 전세계 경제 동반 위축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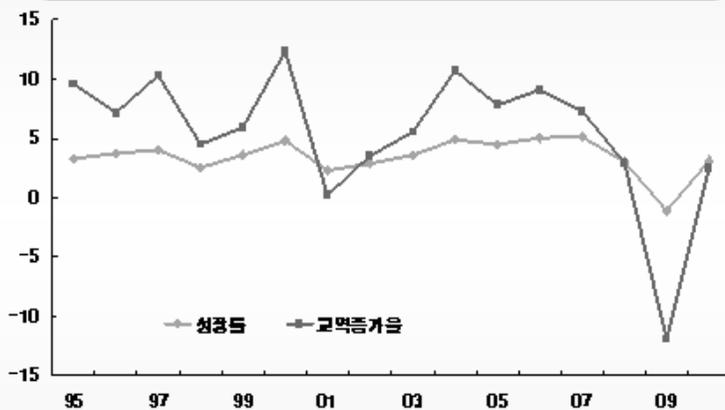
선진국 수요 둔화로 세계 교역 규모 급속 위축

- 교역량 증가율, '07년+7.3% → '08년+3.0% → '09년-11.9%(IMF 전망)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 큰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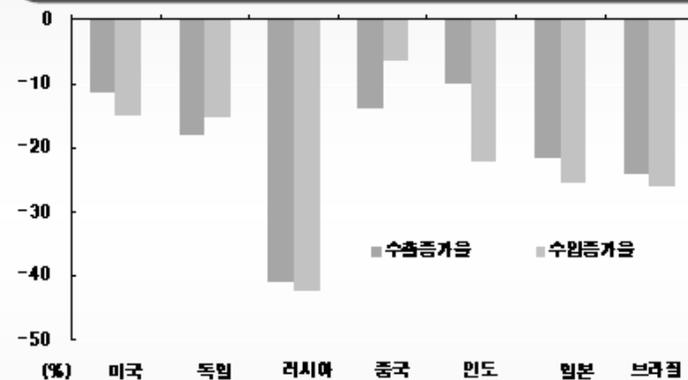
- 신흥국 : 對선진국 수출감소로 어려움,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에도 한계
- 유로존 및 일본도 對美 수출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에 어려움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주: IMF World Economic Outlook('09년 10월)

주요국 최근 수출입 증가율 비교



주: 미국, 러시아, 인도는 8월, 독일, 일본은 9월, 중국, 브라질 10월 데이터
자료: Global Insight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에 대응



대응기조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하며(decisive), 충분하게(sufficient) 대응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아우르는 G20 중심의 국제공조로 대응

대응방향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위기극복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기관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침체 탈출과 일자리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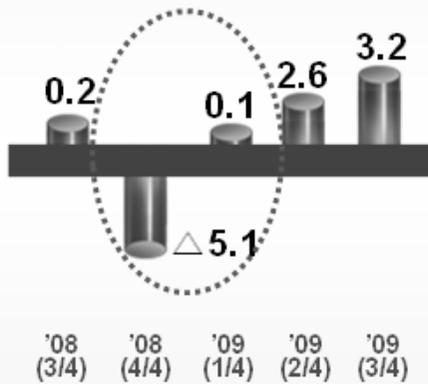
	추진 내용	재정지출 규모	GDP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70억 달러 세제지원(소득세 환급, 주택보유자 세액공제) ▶ 新 뉴딜정책 추진(7,872억달러) 	11,042억달러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토지세 등 감세 1.1조엔 ▶ 가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26.3조엔 규모의 대책 마련 * 1차(08.8월) 2.0조엔, 2차(08.10월) 5.0조엔, 3차(08.12월) 4.0조엔, 4차(09.4월) 15.4조엔 	27.4조엔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인지세 등 감세 0.6조위안 ▶ SOC 건설, 농촌 지원, 의료시스템 개혁 등 4.9조 위안 재정투입 	5.5조 위안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대책, 경제난국극복대책 등 감세 33.9조원 ▶ 경제난국극복 수정예산, 일자리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33.2조원 	67.1조원 (08~12년)	6.9%

금융위기와 우리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09년 1/4분기까지 경기급락 및 금융시장 불안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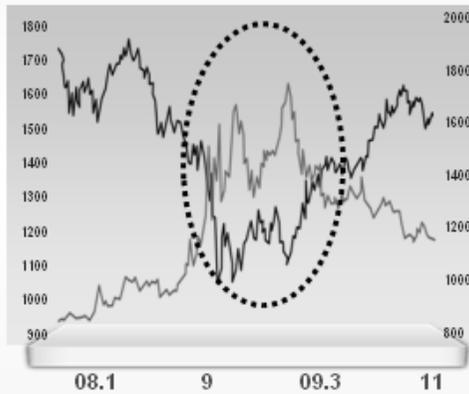
'08.4/4 주요국 중 가장 큰 폭 침체

GDP 성장률(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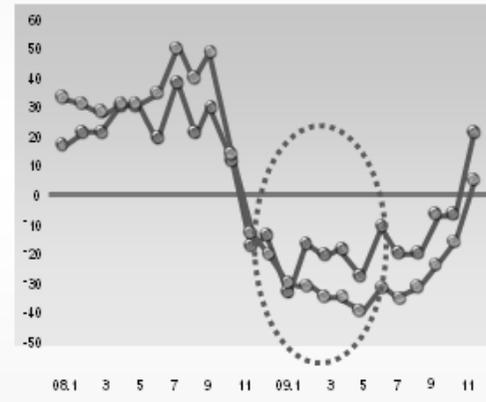
주가급락, 환율급등

— 원/달러(좌) — KOSPI지수(우)



수출 급감

[전년동월비, %] ● 수출 ● 수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선택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스탠스로의 변경이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

- 2008년 초에 제시된 6% 성장 목표, 중기재정운용 방향에서 제시된 7% 성장 목표 등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되면서 정책 집행의 신뢰도가 제고됨.
- 적절한 시점에 취해진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각종 긴급조치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08발표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성장률	%	4.7	4.8~5.2	5.2~5.6	5.8~6.2	6.6~7.0
재정수입	조원	274.3	295	314.7	339.2	367
국세수입	조원	165.6	179.6	188	199.7	212.4
재정지출	조원	257.2	273.8	290.9	308.7	326.7
재정수지	조원	△11.0	△10.4	△9.7	△6.6	0
	GDP대비%	△1.1	△1.0	△0.9	△0.5	0
국가채무	조원	317.1	333.8	355.5	380.1	407.2
	GDP대비%	32.9	32.3	31.9	31.5	30.9



		2009발표					
		2009		2010	2011	2012	2013
		당초	후경				
실질성장률	%	4	△2.0	4	5	5	5
재정수입	조원	291	279.8	287.8	309.5	337.6	361.7
국세수입	조원	175.4	164	168.6	182.1	199.8	219.5
재정지출	조원	284.5	301.8	291.8	306.6	322	335.3
재정수지	조원	△24.8	△51.0	△32.0	△27.5	△16.1	△6.2
	GDP대비%	△2.4	△5.0	△2.9	△2.3	△1.3	△0.5
국가채무	조원	349.7	366	407.1	446.7	474.7	493.4
	GDP대비%	34.1	35.6	36.9	37.6	37.2	35.9

경기급락 차단 및 금융시장 안정화

KDI

적극적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의 지속을 방지

-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집행
 - * 상반기 재정집행률(%) : ('08)49.6 → ('09)64.8
- 노후차 교체지원 등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소비 보완
- 기준금리 인하(6차례) : 5.25% → 2.0%
-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왑 체결(각각 300억달러)
-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시스템 불안 소지를 사전 차단
- 건설, 조선, 해운 등 부실우려업종과 신용위험이 큰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 심리 등 각종 지표 호전



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안정되며 신용경색 완화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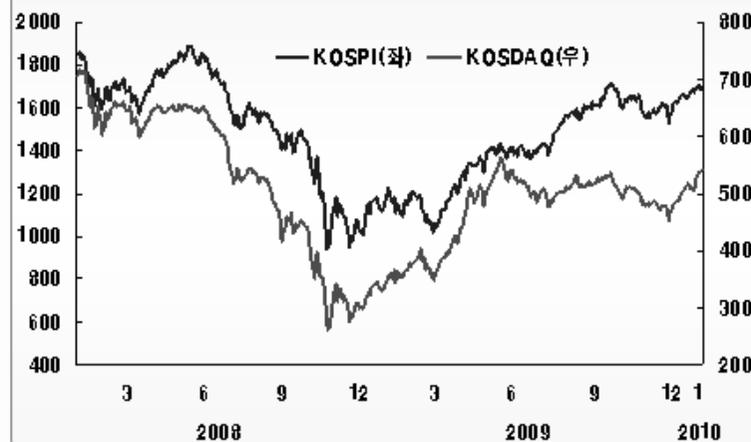
주가는 1600대로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국채·회사채간 스프레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기업 자금사정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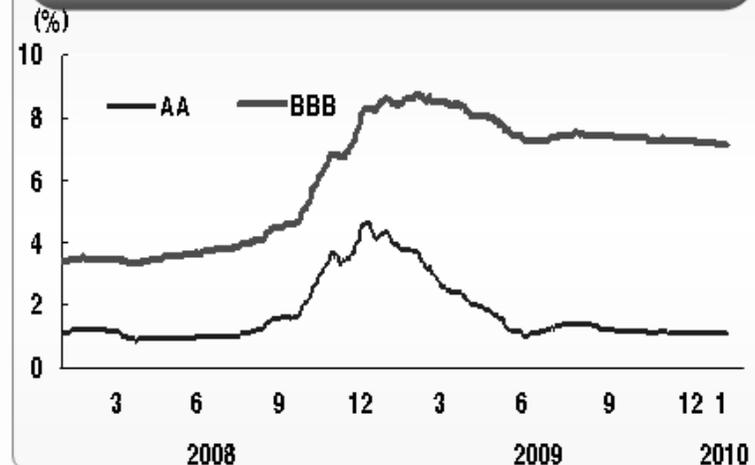
기업 및 가계 심리지수도 상승세로 전환

BSI & CSI 추이: '08.9월 : 73 & 96 → '09.1월 : 47 & 84 → '10.1월 : 93 & 113

KOSPI 및 KOSDAQ 추이



국채-회사채 스프레드(3년) 추이



신용위험 큰 폭 축소



한국 신용위험은 글로벌 불안심리 호전 및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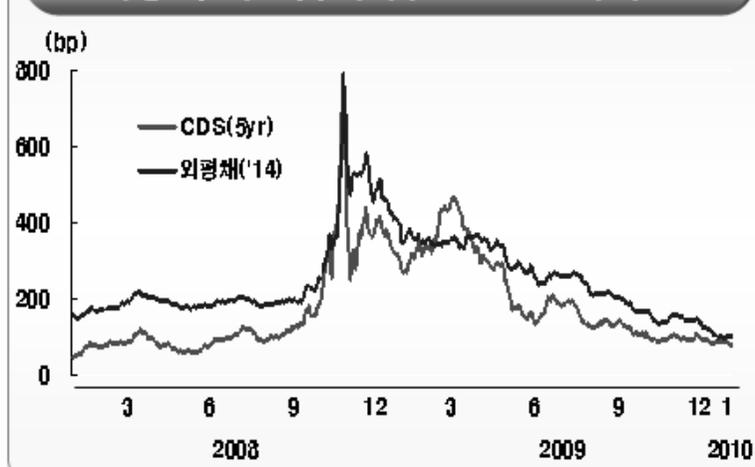
외평채가산금리('14) : '07년말 98bp → '08.10월 791bp → '10.1월말 117bp

CDS 프리미엄(5yr) : '07년말 45bp → '08.10월 699bp → '10.1월말 106bp

' 09.1~10월중 해외채권발행액은 199.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배 수준

2008년 해외채권발행액 75.8억달러(37건), 2007년 142억달러(31건)보다 상회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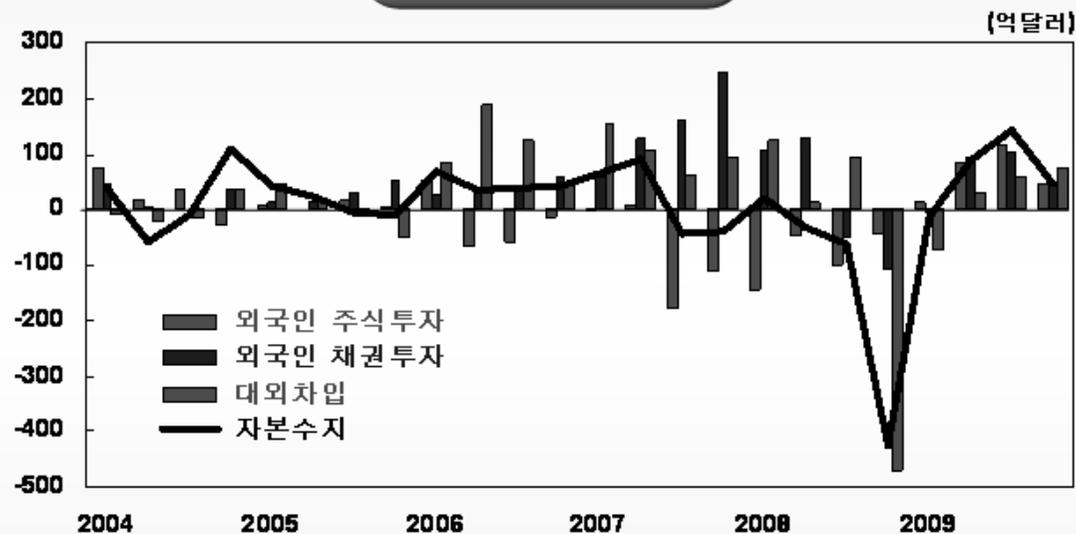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상황 (1)

KDI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 2008년 4/4분기중 426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던 자본수지가 2009 1/4분기 균형에 접근한 후, 2/4분기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

자본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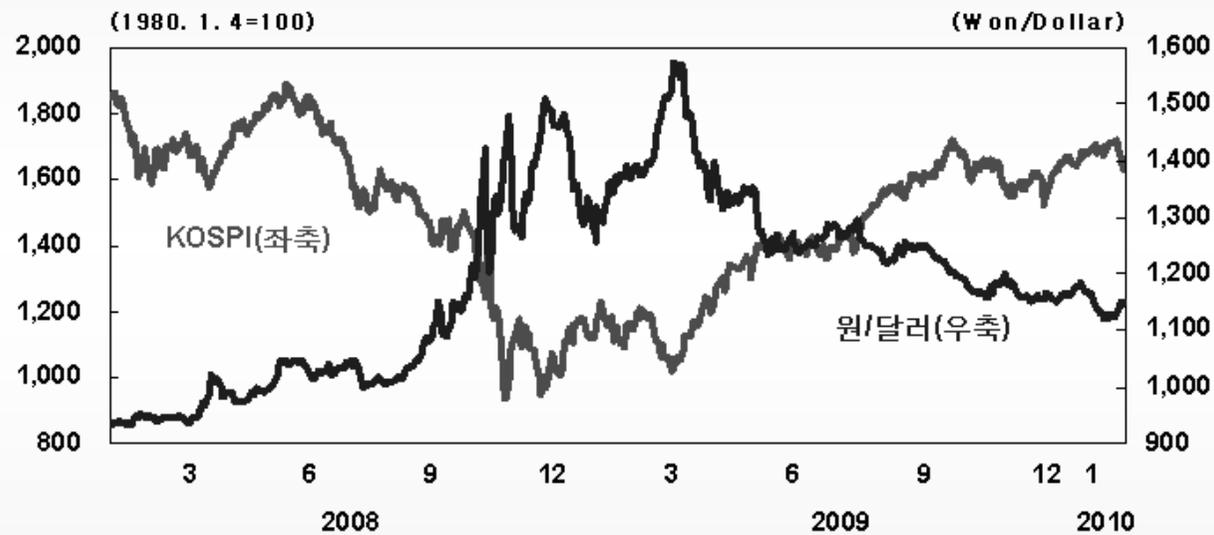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상황 (2)

KDI

특히, 각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KOSPI &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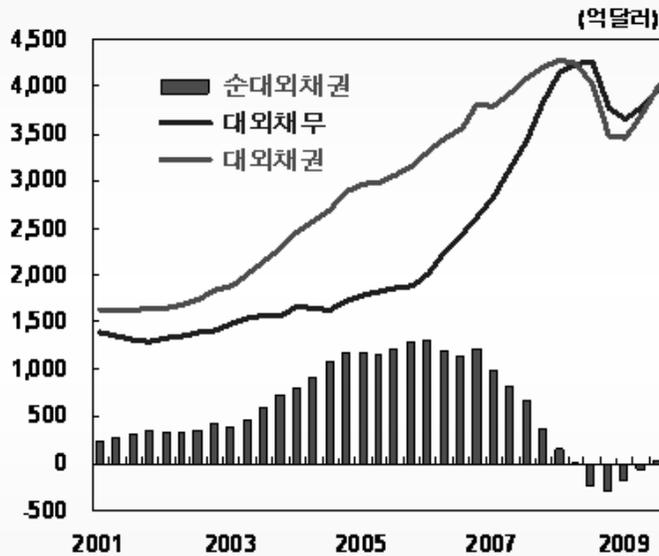


금융시장 위험요인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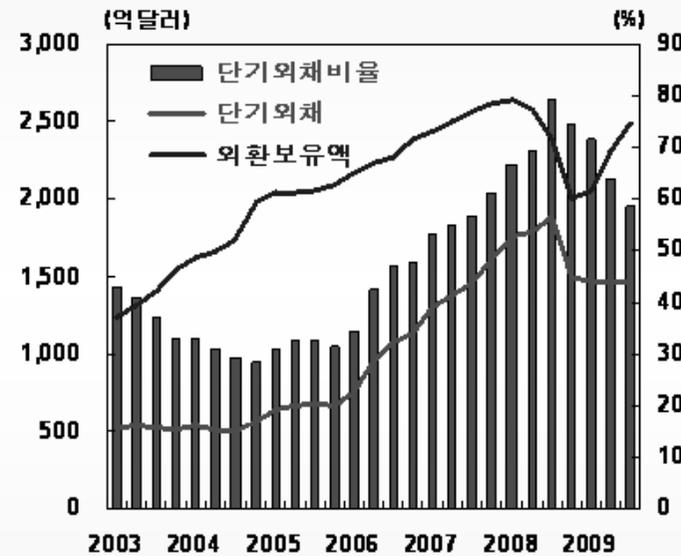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던 단기외채 비중은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대외채무, 대외채권 및 순대외채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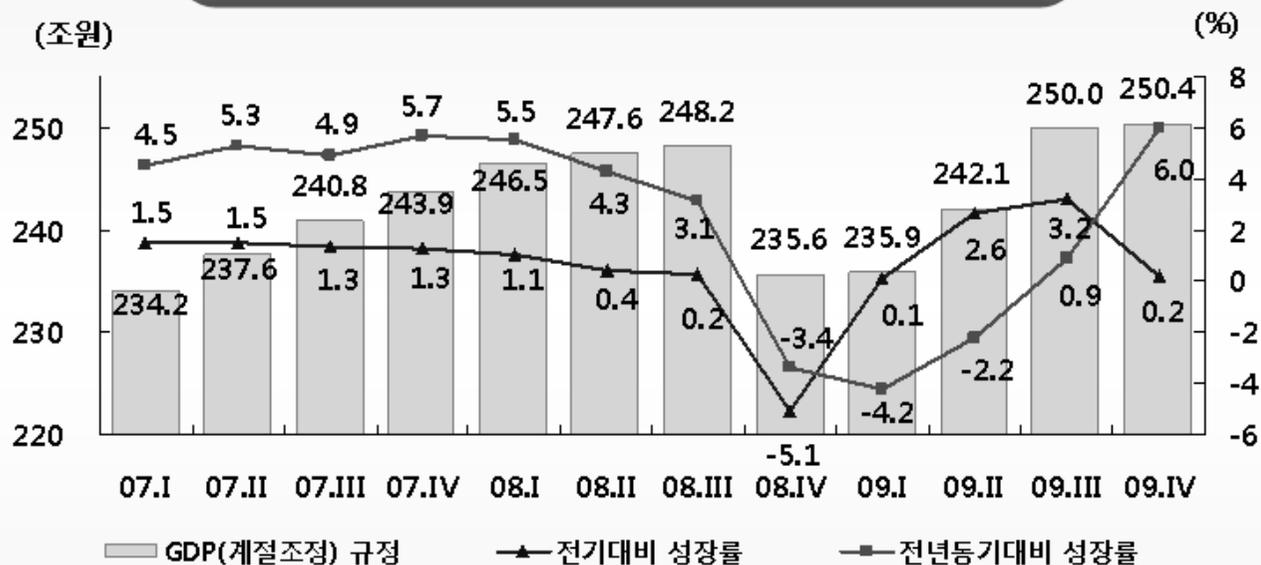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추이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을 지속하는 모습

분기별 GDP 성장률



OECD 국가 성장률 비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경제 회복세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

GDP성장

	2008				2009			
	Q1	Q2	Q3	Q4	Q1	Q2	Q3	Q4
한국	1.1	0.4	0.2	-5.1	0.1	2.6	3.2	0.2
프랑스	0.5	-0.4	-0.2	-1.5	-1.4	0.3	0.2	0.6
미국	-0.2	0.4	-0.7	-1.4	-1.6	-0.2	0.6	1.4
영국	0.7	-0.1	-0.9	-1.8	-2.5	-0.7	-0.2	0.1
OECD	0.5	-0.2	-0.6	-1.9	-2.2	0.1	0.6	0.8
EU	0.8	-0.2	-0.5	-1.9	-2.4	-0.3	0.3	0.1
독일	1.6	-0.6	-0.3	-2.4	-3.5	0.4	0.7	0.0
일본	0.9	-1.3	-1.1	-3.0	-3.2	1.3	0.0	1.1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도 비교적 빠르게 완화

- 내수의 개선에는 환율 안정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실질구매력 강화)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성장에 대한 내수 항목별 기여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성장 (%)	5.1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민간소비 (%p)	2.8	0.5	2.3	1.2	0.8	-2.0	0.1	-2.5	-0.5	0.4	2.9
설비투자 (%p)	0.9	-0.2	0.1	0.1	0.4	-1.3	-0.8	-2.2	-1.5	-0.7	1.1
건설투자 (%p)	0.3	-0.4	-0.4	0.0	0.0	-1.0	0.6	0.0	0.8	0.5	1.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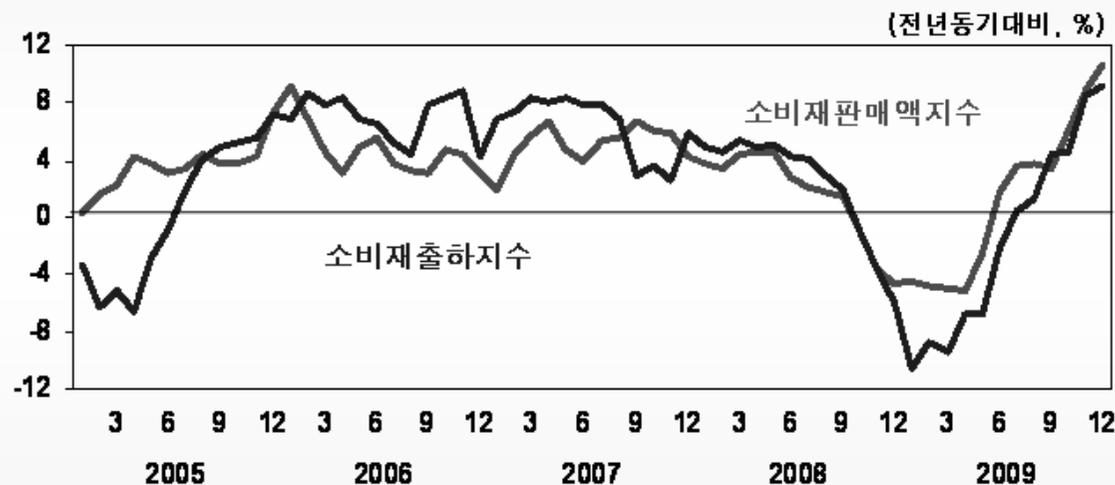
[민간소비 부진의 완화]

KDI

소비관련지표들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최근의 민간소비 증가에는 승용차 세제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도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유지
- 소비자심리지수도 실물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소비재판매액지수 및 소비재출하지수 (3개월 이동평균)



[민간부문의 투자 개선]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 및 기업 수익성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극심한 위축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3개월 이동평균)



최근 경기 추이 - 수출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도, 최근 민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의 주요 요인

- 대중국 수출금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009년 9월 이후 플러스로 반전하는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
 - 대중국 수출액 증가율(%) : (8월) -10.3 → (9월) 3.4 → (10월) 9.5 → (11월) 54.1 → (12월) 93.1
- 특히, 액정디바이스 등 IT 부문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액정디바이스 수출액 증가율(%) : (8월) 32.2 → (9월) 29.0 → (10월) 38.9 → (11월) 67.1 → (12월) 175.7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전년동기, %)	5.1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순수출 기여도 (%p)	0.5	0.9	0.6	1.2	0.3	1.6	4.3	4.1	5.3	5.3	2.5
내수 기여도 (%p)	4.7	0.6	2.7	2.0	1.9	-3.5	0.6	-3.7	-0.2	1.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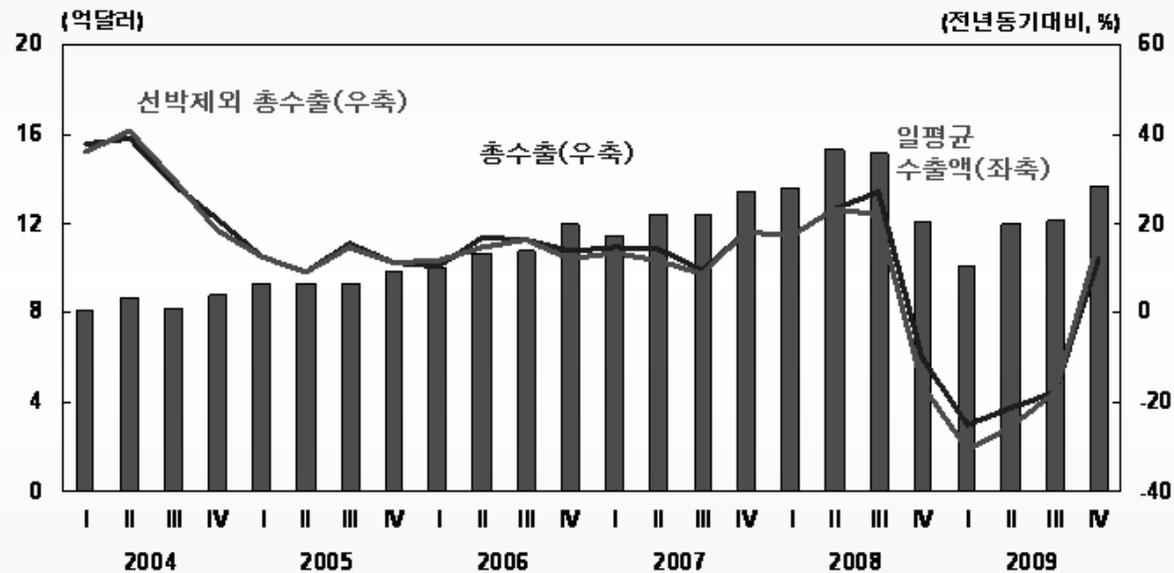
주 : 내수 기여도는 지고 증감을 제외하여 계산.

[수출 개선 추세의 지속]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세를 유지(11월중 전월대비 3.8%)하는 등, 수출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음.

- 11월중 총수출 증가율도 2008년의 수출 급락에 기인하여 큰 폭의 증가(18.8%)로 전환

총수출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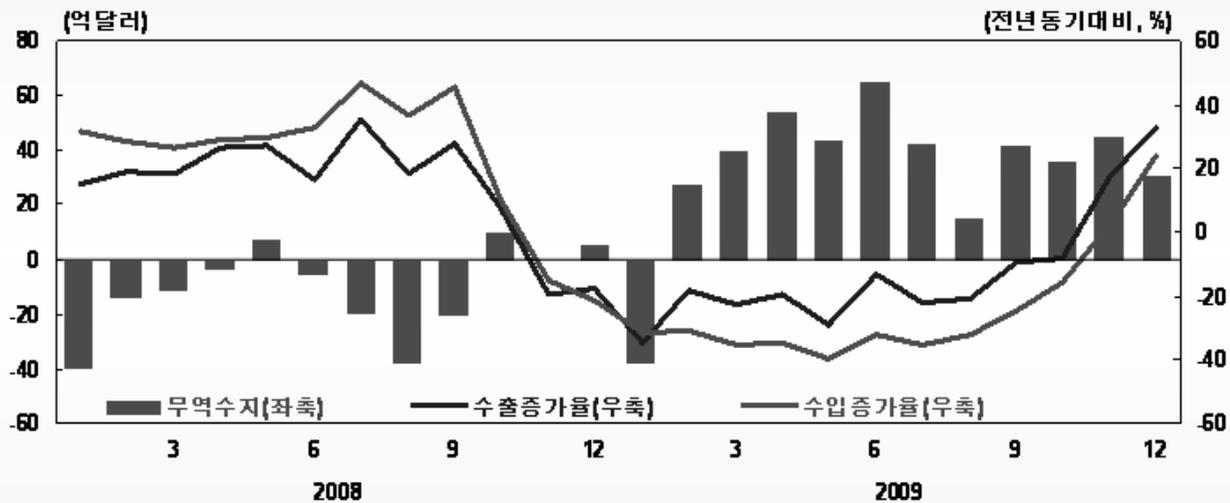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 - 무역수지

KDI

무역수지는 작년 2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 감소세 완화와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 우리 상품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로, 상품수입 확대는 투자 및 생산능력 재확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흑자폭 축소가 부정적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움.

무역수지 및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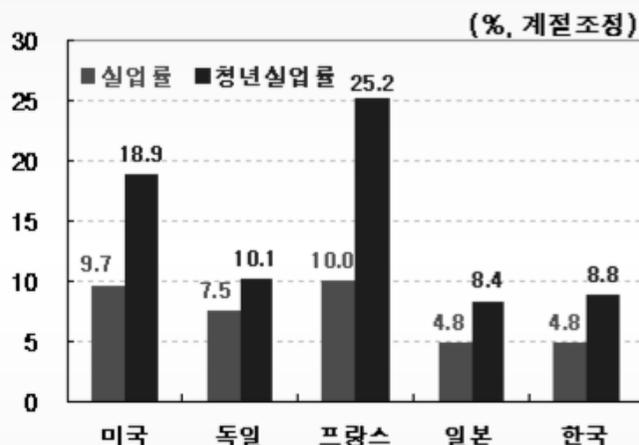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 - 고용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

- 단, 최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에 다소 후행하여 고용 부진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국 실업률 비교



주: 1) 미국, 한국은 2010년 1월 기준.
2)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계절조정 전 원계열 수치.

취업자수 증감 (3개월 이동평균)



주: 비공공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 제외.

경기 회복세에 대한 평가 - 정책효과 KDI

20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정부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 급락을 완충하는 데 기여

- 재정지출 확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경기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임.
- 다만, 2009년 2/4분기 이후에는 수출과 더불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

지출별 GDP성장률(전기대비) 기여도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소비	건설투자	수출	수입
1/4분기	0.2%p	-1.0%p	0.6%p	1.0%p	-2.5%p	5.1%p
2/4분기	2.0%p	0.8%p	0.2%p	0.3%p	5.3%p	-4.1%p
3/4분기	0.8%p	0.9%p	-0.1%p	-0.4%p	2.5%p	-3.4%p
4/4분기	0.0%p	0.4%p	-0.5%p	0.0%p	-1.0%p	0.4%p

경기 회복세에 대한 평가 - 불확실성 상존 ¹KDI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잔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구조는 지속

-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완화되고 있으나,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제기
- 기업부채(GDP대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은 구조로, 기업부실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주요국의 GDP 대비 부문별 차입금 비율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가계 부문	78.3	100.5	66.2	100.5	110.5
기업 부문	112.8	77.0	102.1	112.9	81.4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09년 4월).

III. 우리 경제 전망

대외 경제 여건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위축이 점진적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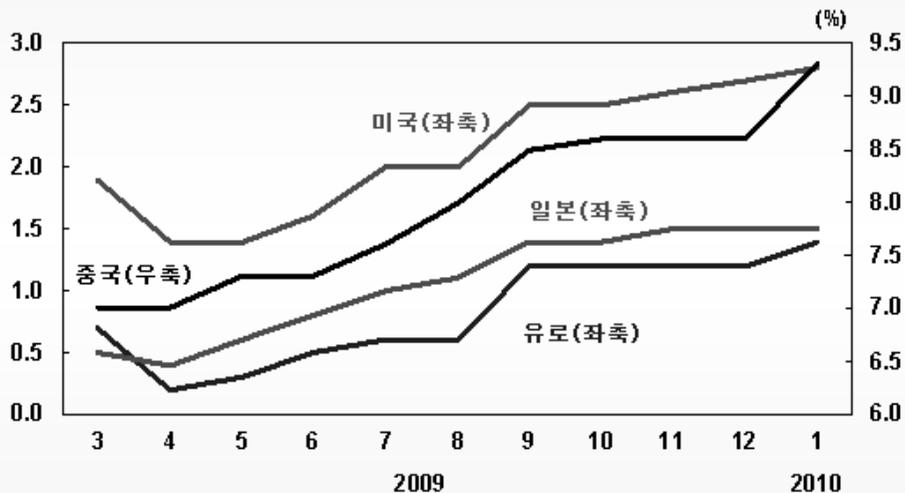
- (실물경제 경로)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경로) 2008년 10월과 11월에 발생했던 정도의 국제금융시장 경색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유출 위험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
 -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프리미엄이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된 모습
- (위험요인)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세계경제 전망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의미 있는 세계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전세계적 실물경기 하강 국면은 지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선진국의 고용 부진과 de-leveraging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10년에 대한 TIU 전망치의 수정 추이



우리 경제 전망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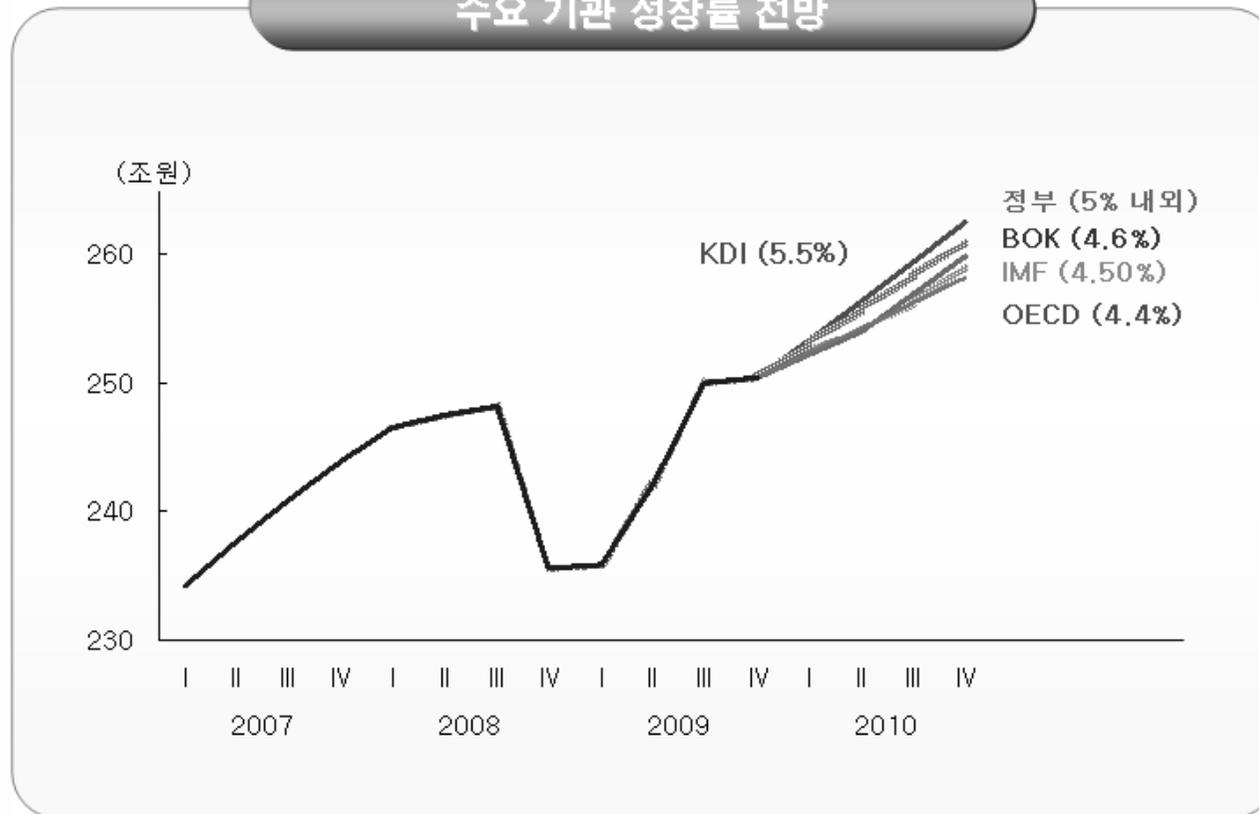
- (수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회복세는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내수) 향후 재정여력이 약화되겠으나 작년도 재정지출 확대의 파급효과가 일부 이연되고,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생산)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내외 수요 증가가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단, 최근의 경기 개선속도가 정책효과와 더불어 2008년 4/4분기 이후 경기 급락에 따른 반등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대비 성장률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

우리 경제 전망 - 성장률



2010년의 성장률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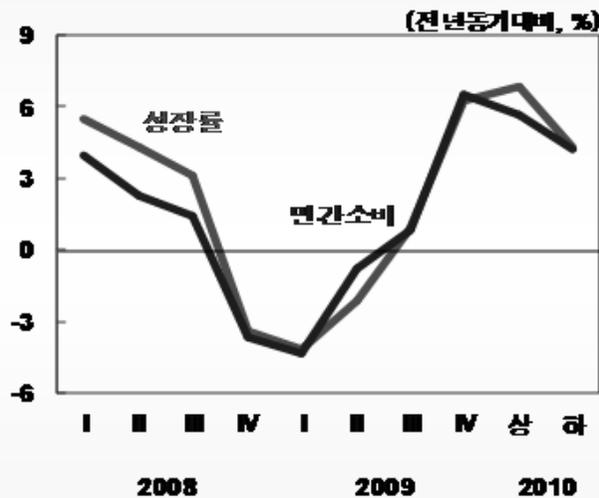
우리 경제 전망 -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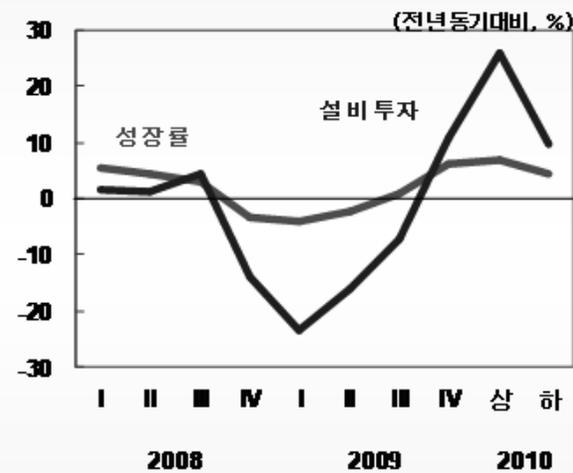
내수 회복세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소비는 경기 회복 및 고용 개선과 더불어, 임금이 작년의 감소세에서 금년에는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5% 내외의 회복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환율 안정으로 설비투자 비용이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10%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성장률과 민간소비 전망



성장률과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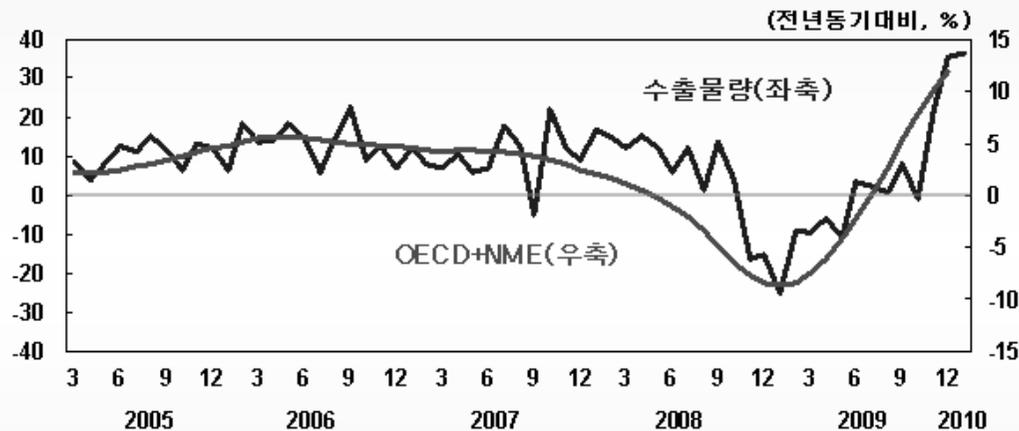


우리 경제 전망 - 수출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등 해외수요 확대에 기인하여 8%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수출금액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출단가 영향이 추가되면서 1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한국 경제의 수출과 OECD선행지수



주 : 1) 수출물량=선박제외 총수출액/수출단가 (단, 수출단가는 작년 12월까지만 발표된 관계로 금년 1월중에는 수출물가(달러기준)와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하였음.
 2) NME(Non-member Major Economy):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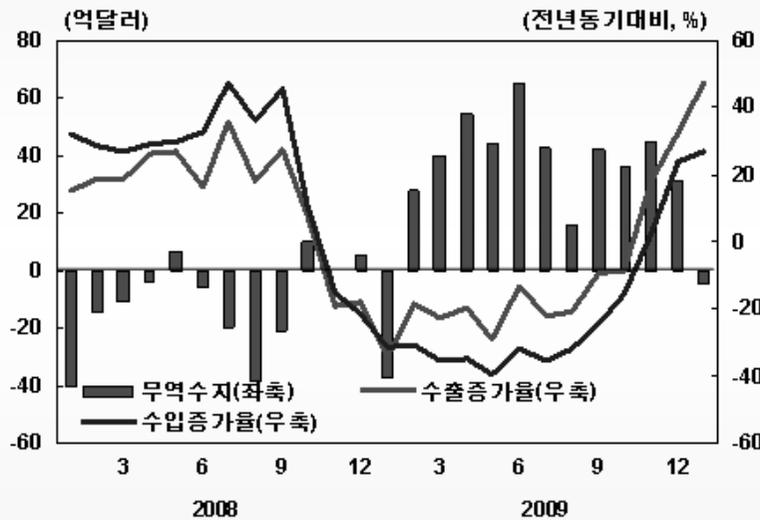
우리 경제 전망 -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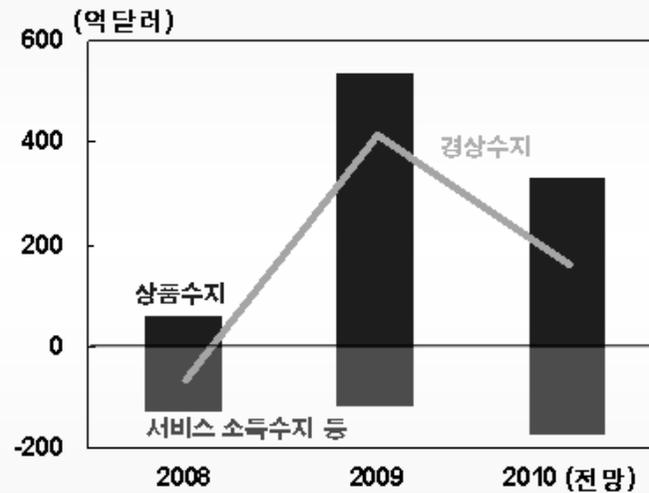
경상수지는 올해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9년에 400억달러를 상회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6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가능성

무역수지 및 수출입 증가율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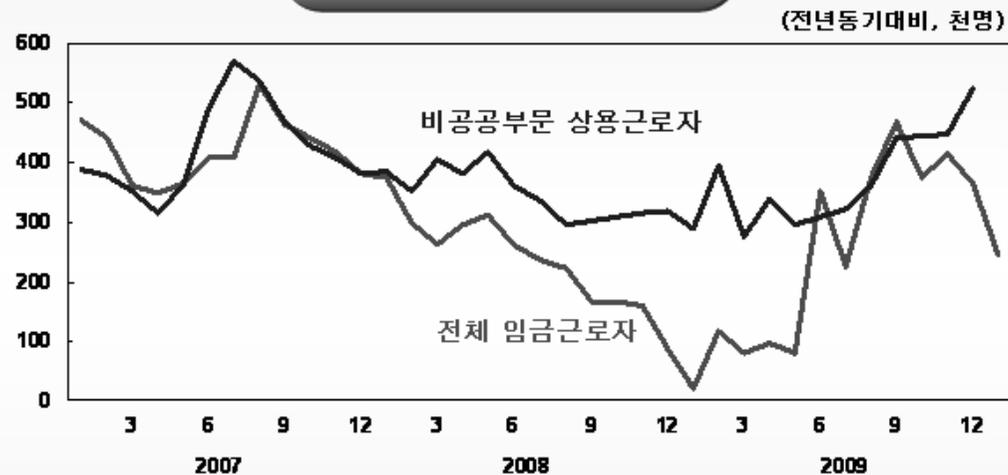


우리 경제 전망 - 고용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낮아져 평균 3.4%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최근의 비공공부문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임금근로자 증감



주: 1) 비공공부문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이 제외됨.
 2)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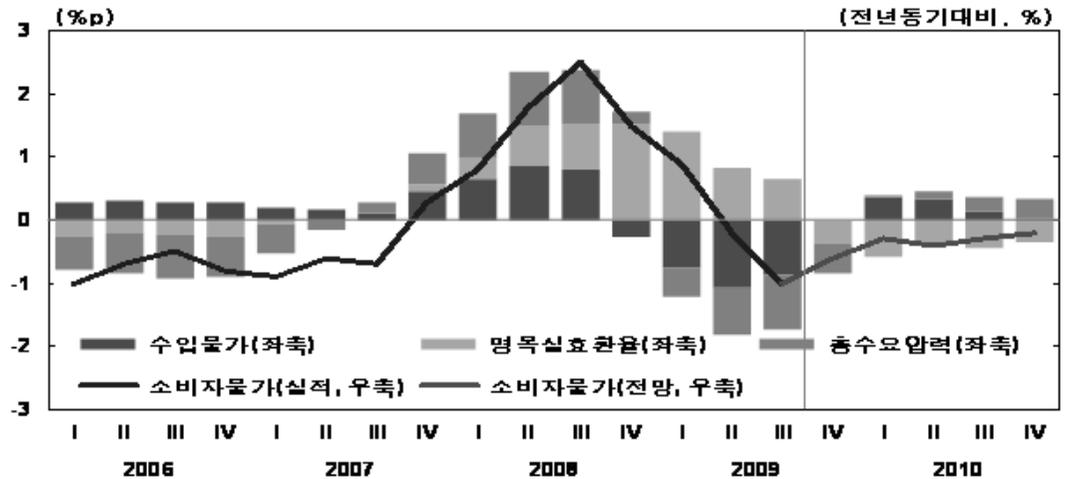
우리 경제 전망 - 물가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금년 연간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금년도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총수요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물가 상승압력은 환율 안정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및 전망



주: 세 가지 거시경제 요인(수입물가, 환율, 총수요압력)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분석된 것임.

참고 : KDI의 우리 경제 전망

KDI

2008-2010년 거시 경제의 모습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	1/4 ^p	2/4 ^p	3/4 ^p	4/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2.2	-4.2 (0.1)	-2.2 (2.6)	0.9 (3.2)	6.0 (0.2)	0.2	6.9 (1.0)	4.3 (1.1)	5.5
민간소비	0.9	-4.4	-0.8	0.8	5.6	0.2	5.7	4.2	4.9
설비투자	-2.0	-23.5	-15.9	-7.4	12.9	-8.9	25.9	9.7	17.1
건설투자	-2.1	1.6	3.7	2.7	3.9	3.1	2.2	3.8	3.1
상품수출(물량)	6.4	-14.1	-4.2	1.8	13.0	-1.0	12.3	4.1	7.9
상품수입(물량)	0.9	-17.4	-14.3	-7.9	8.8	-8.1	16.3	6.8	11.3
경상수지	-57.8	86	131	104	106	427	65	97	162
상품수지	56.7	83	176	147	155	561	166	168	334
(수출증가율)	(13.6)	(-25.2)	(-21.1)	(-17.6)	(11.7)	(-13.9)	(22.8)	(6.3)	(13.7)
(수입증가율)	(22.0)	(-32.6)	(-35.7)	(-31.0)	(1.4)	(-25.8)	(33.5)	(13.2)	(22.2)
서비스·소득수지 등	-114	3	-45	-43	-50	-135	-101	-72	-173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7 (4.2)	3.9 (5.0)	2.8 (3.9)	2.0 (3.0)	2.4 (2.4)	2.8 (3.6)	2.6 (2.3)	2.7 (2.3)	2.7 (2.4)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5)	3.8 (3.9)	3.6 (3.7)	3.3 (3.5)	3.6	3.5 (3.4)	3.3 (3.4)	3.4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

2) 2010년도 상반기 국내총생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해당 2분기의 전분기대비 성장률 평균.

IV. 정책 대응 방안

향후 정책방향



대응 기조

위기 관리 “생존”	미래 준비 “전환”	경제 재도약 “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 재정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개편 •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 규제혁신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 미래인력 양성 • 노사관계 혁신 • 국제 공조 (G-20) • 공기업 선진화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확대 • 신성장산업 확대 • 녹색산업 성장 • 해외진출 확대 • 해외역량 극대화

“세기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KDI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고용 개선 및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

- 최근 개도국 중심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상존하는 등 국제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 더불어, 경기 회복국면에서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경기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모색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

- 위기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 위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
- 한편, 향후 고령화 등으로 요소투입 증가 위주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둘 필요
- 특히,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기반의 구조적인 확대를 도모

● ●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 ●
원 윤 희
(한국조세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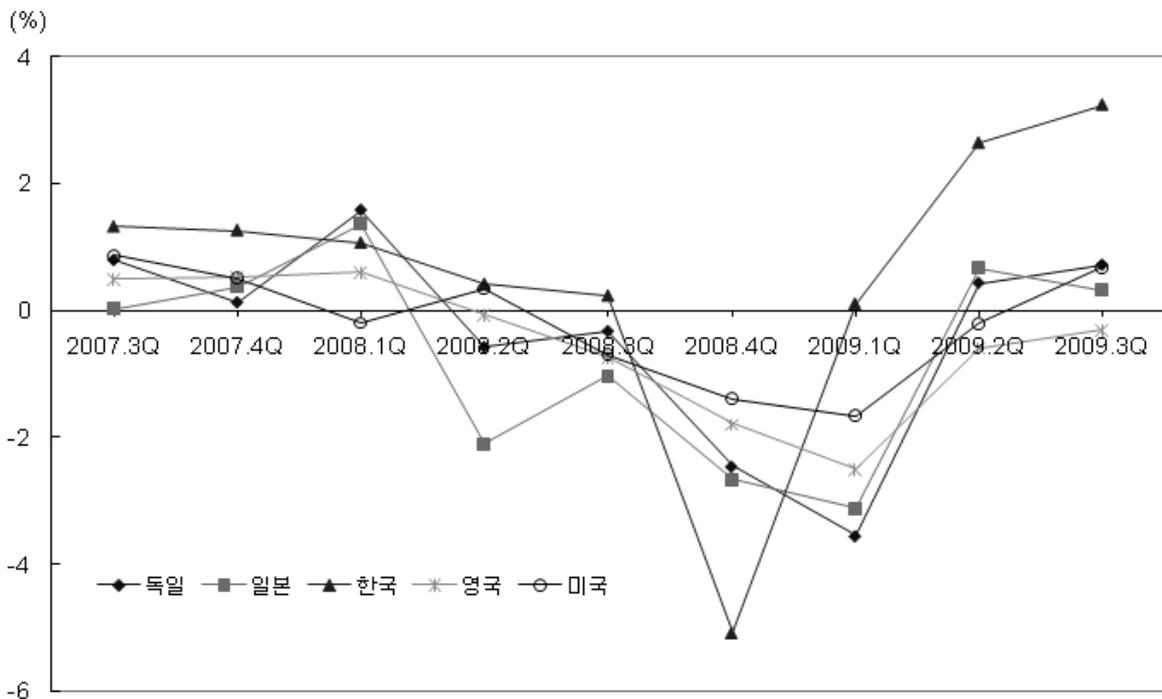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원 윤 희
(한국조세연구원장)

1. 지난 2년 정책의 성과

- 지난 2년 조세·재정정책은 크게 집권초기부터 시작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정책(2008년 이후)과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 정책으로 구분
- 감세정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유가 환급금 지급 등
- 경제위기 극복 정책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증과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그림] 주요국의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에 실시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정책은 이어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시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여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
 - 2009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경제위기 당시인 2008년 하반기에 지급된 유가환급금 등은 성장률, 민간소비 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
- 소득세법 개정(1단계 세율인하, 공제조정)으로 2009년 가계소비는 약 0.98%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분위별로는 누진소득세 구조에 따른 세액감면액 차이로 10분위가 1.36%로 가장 높고 1분위가 0.15%로 가장 낮음
 - 평균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35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6만8천원(0.98%)의 소비증대를 유도
 -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실적치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1〉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가계소비 변화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 소 득	10,574	18,160	24,341	29,990	36,142	42,593	49,592	58,051	69,918	103,880	44,323
감 면 세 액	11	37	73	129	235	302	413	543	662	1,149	355
소비증가액	26	43	72	117	196	245	309	394	435	629	268
소비증가율(%)	0.15	0.25	0.36	0.52	0.78	0.86	1.00	1.14	1.16	1.36	0.98

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비증가액은 분위별 평균소비성향(2008)을 이용하여 추정

-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을 약 1% 내외 증가시켰으며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증가에 기여
 - 2008년 가구소득기준 지니계수도 0.15% 개선

〈표 2〉 유가환급금 지급에 따른 총소득 변화

(단위: 만원, %)

소득계층 \ 항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 소 득 (A)	162.7	601.1	1104.9	1699.1	2297.7	2923.1	3654.2	4554.8	5987.1	9982.5
유 가 환 급 금 (B)	1.4	2.6	5.8	8.7	10.8	13.0	12.6	9.6	11.1	5.6
소득변화율 ($\frac{B}{A-B} \times 100$)*	0.87	0.45	0.53	0.51	0.48	0.45	0.35	0.21	0.19	0.06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2009)

〈표 3〉 유가환급금 지급에 따른 분배개선

(단위: %)

	총소득(A)	총소득-유가환급금(B)	변화율($\frac{A-B}{B} \times 100$)
Gini계수	0.4689	0.4696	-0.15

- 법인세율 3%p 인하도 투자율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GDP를 0.48~0.59% 증가시키는 효과 기대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율(I/K)을 1.47% 증가시켜 약 11만명(2006년 기준)의 취업을 유발하며 중기적으로는 투자율 1.77% 증가
 - 투자증대를 통해 GDP는 0.48 ~ 0.59% 증가

〈표 4〉 법인세율 3%p 인하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율 3%p 인하(25%→22%)
투자율(I/K) 증가	1.47%
장기(5년) 투자율(I/K) 증가	1.77%
GDP 증가율	0.48 ~ 0.59%
취업 유발	113,907명

자료: 성명재·박형수(편),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2. 향후과제

- 2010년 이후 중요 정책과제는 고용능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 할 수 있음
 - 고용확충(고용률 제고)은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과제
 - 재정건전성 회복은 대외적 경제 신뢰도 유지에 따른 경제안정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차원에 중요한 과제
-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노동수요의 부족, 부문적으로는 수요-공급간 불일치(Mismatch)가 공존하는 형태
 - 사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소기업과 3D업종의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구직자, 구직 단념자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

- 장기적 정책방향은 교육 정원 등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과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 등이 중요
 -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 대안들은 인력공급의 구조변화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의 진학을 우대하는 교육비 공제제도, 산학협동 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보육시설 투자수익금에 대한 배당관련 세부담 감면, 여성 근로시 보육비 공제를 우대하는 차등화 방안,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인하 등
 - 구체적인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필요
- 단기적인 정책대안들은 기업 및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중요
 - 고용증가에 기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혹은 (중소기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 기준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시와 같이 고용창출 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근로장려금(EITC)제도의 업종별, 부부 근로형태별 차등화, 신규 근로연계 공제 제도의 도입, 고용규모에 따른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 운영 등
- 재정 건정성의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
 -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더디게 회복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
 - 그러나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더블딥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전망이며, 특히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듯
- 우리의 경우 경제 및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에 있지만 정책적 대응 필요
 -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또한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국가채무 통계 개선, 공기업 재무구조 건전성 관리 강화,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 관리 강화 등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
 -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함



서민복지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론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서민복지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 용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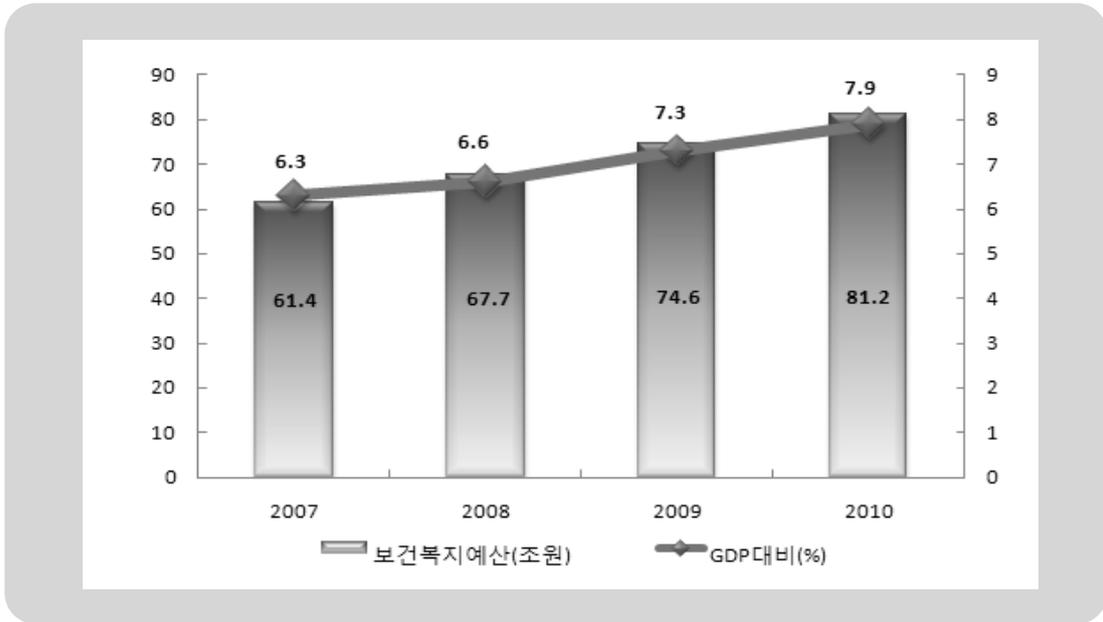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지난 2년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997년의 경제위기시에는 대량실업으로 분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이번 경제 위기에서는 분배 관련 지표 등을 큰 변화없도록 관리
 -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도 위기에 대응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시킴으로서 우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
- 복지예산은 경제불황과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함.
 - 복지예산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과 부족하다는 양극단의 주장이 있으나 제한적인 경제 및 재정 여건과 높은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감안하여 비교적 적정선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기존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노령계층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
 -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 파급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지대책들을 획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의를 실현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구축으로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
 - 전반적인 일자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는 눈에 띄게 증가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취약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복지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재정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

1. 보건복지 예산 변화추이

□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예산은 2007년 61.4조원에서 2010년 81.2조원으로 증가하여 약 3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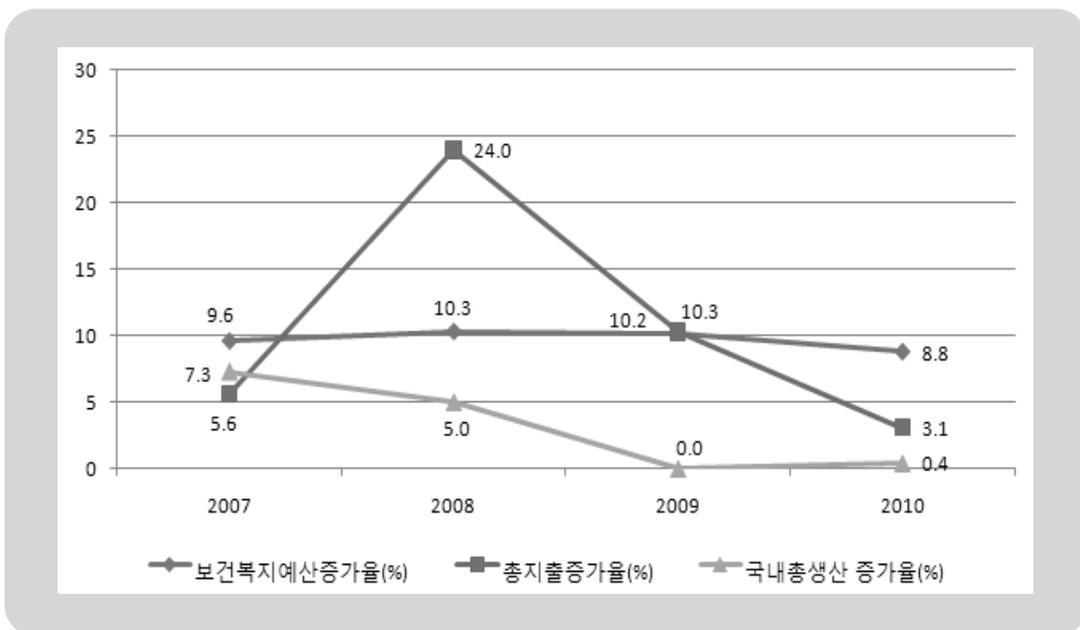
○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며, 보건복지분야 사회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9%에 이룸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 보건복지분야 사회예산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2008년 이후 사회예산 증가는 주로 사회보험 성숙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도입에 기인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2008년 16.5조원에서 2010년 19.7조원으로 19.8% 증가

○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중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관련 비중의 증가와 기초 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가가 특징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분야별 세출예산(2008~2010년)〉

구 분	2008년	2009년 ¹⁾	2010년
총 계	16,477,186	19,899,843	19,737,416
총지출	16,303,308	19,709,983	19,404,514
사회복지	12,153,549 (74.5%)	14,568,392 (73.9%)	14,231,321 (73.3%)
기초생활보장	7,264,372 (44.6%)	7,973,099 (40.4%)	7,292,933 (37.5%)
취약계층 지원	2,940,509 (18.0%)	4,124,210 (20.9%)	4,340,616 (22.3%)
공적연금	50 (0.000%)	280 (0.001%)	395 (0.002%)
보육, 가족, 여성	1,583,417 (9.7%)	1,838,316 (9.3%)	2,154,481 (11.1%)
사회복지일반	365,201 (2.2%)	632,487 (3.2%)	442,896 (2.2%)
보 건	4,149,759 (25.5%)	5,141,591 (26.0%)	5,173,193 (26.6%)
보건의료	619,837 (3.8%)	963,871 (4.8%)	853,642 (4.3%)
건강보험	3,529,922 (21.7%)	4,177,720 (21.1%)	4,319,551 (22.2%)
내부거래	173,878	189,860	332,902
회계, 계정간 거래	102,156	117,838	118,910
기금전출금	71,722	72,022	213,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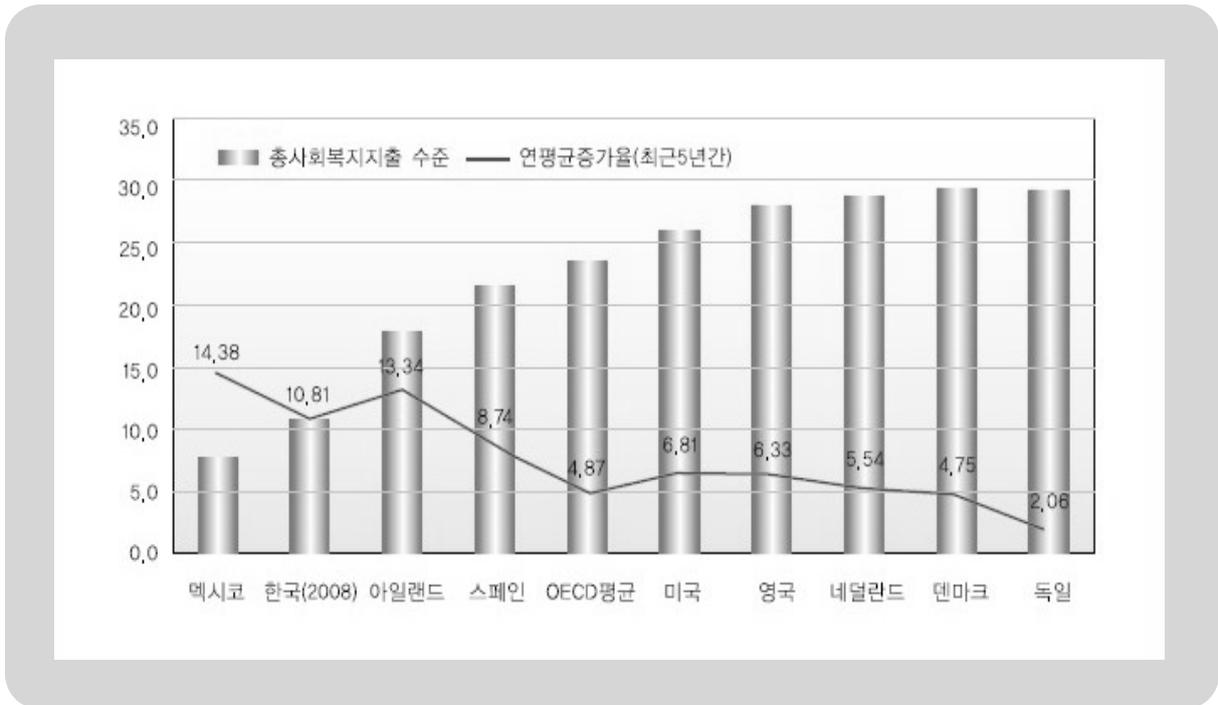
주 1): 추경예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각 연도

- 2008년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12조 1,720억원으로 GDP 대비 10.95%
- 총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추계 이후 연평균 17.5%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율을 기록
- 그러나 OECD 평균은 23.7%로서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은 가장 낮은 수준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증가율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



2. 보건복지제도의 개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

□ 대상자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09년 28만명 → 2010년 38만명

□ 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 평가 및 과제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가족수발의 한계 및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의적절한 제도로 평가
- 아직까지 제도정착기로서 수혜대상의 협소성 극복, 안정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충,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의 과제 해결 필요

나.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법(2007. 4)

- 200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하위 70%에게 조세(국비 및 지방비)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상당의 정액연금 지급

□ 소득기준 완화(2010. 1): 선정기준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2009년 68만원(노인부부 108.8만원) → 2010년 70만원(노인부부 112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2009년 363만명 → 2010년 375만명(12만명 증가)

□ 급여액 인상(2010. 4)

- 2009년 최대 8만 8,000원 → 2010년 최대 9만 1,000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금액(만원)	8.4	8.8	9.1

□ 평가 및 과제

-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수준이 높고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보전과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록 노인이라는 대상의 한계는 있으나 기초연금의 시행은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
-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액의 인상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을 통한 재구조화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현안

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

□ 근로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

-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복합 장애) 33만명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9만1000원~15만1000원의 연금 지급(2010. 7)

□ 수혜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상에 대한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비교〉

	장애수당(기존)	장애인연금(2010. 7 이후)
지급대상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급인원	23만명	33만명
지급월액 (기초/차상위/신규)	13/12/0만원	15/14/9만원

□ 평가 및 과제

- 대부분의 장애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도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별적인 수당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보편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
- 다만 여전히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급여수준과 수급대상자 선정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반 장애인소득보전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

라. 미소(美少)금융

- 자활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microcredit)
- 지원 대상: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서 저소득·저신용인 자
- 지점: 2010년 2월 5일 현재 전국에 25개의 미소금융 지점 설립
- 지원 내용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창업 임차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
- 평가 및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못지않게 의미있는 정책
 - 여러 지자체와 휴면예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계와 금융권의 재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대출심사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대출과정이 복잡하여 실제 대출율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마.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제도
- 수혜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58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C학점 이하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가능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
- 대출금액 및 금리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대출 가능
 - 2010년 1학기 대출금리는 5.7%(2009년 2학기보다 0.1%p 인하)
- 재정지원 규모: 2014년까지 매년 약 1조 6,000억원의 재정 투자 계획

〈든든학자금 재정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0~2014 (연평균)	2015~2019 (연평균)	2020~2029 (연평균)
현 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8,222	15,923	28,390	29,376
추가 소요(B-A)	3,205	9,047	19,080	16,380

□ 평가 및 과제

- 과거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
- 든든학자금 제도는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높은 자립심 고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가져다 주는 획기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제도로 평가
- 장기적인 대출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하는 장기 미상환 등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바. 보금자리주택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2010년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좋은 입지에 공급 본격화
- 공급량 : 2018년까지 150만호
- 서민부담 감소를 위해 시범지구의 경우 시중가의 50~70% 선에서 분양가 책정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2009~2018)〉

유형		호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호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공임대 (10년 임대)	20만호	-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거나 10년간 주택 가격을 분납해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
	장기전세 (10~20년 임대)	10만호	-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호	- 국민임대 40만호 : 시중가의 60~70% 공급 - 영구임대 10만호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재개

□ 평가 및 과제

-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낮추고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서 주거복지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평가
-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보상금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 필요

3.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로 2010년 1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
 - 1단계(2010년)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업무범위·역할정립 등 제도화 기반 구축
 - 2단계(2011년 이후) :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 마련(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요양대상자 확대 등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 창출
 - 대상자 확대: 2009년 28만명 → 2010년 38만명
- 재정지원 일자리
 -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1만개) 확충 및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자활근로 1.7만개, 자활공동체 광역화·기업화)
- 사회복지시설 인력
 -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1.5만개 내외 증가
-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
 -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2만개 내외)

〈2010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2009년	2010년	(단위:만명) 증감
		112.9~117.2	12.9~17.2
보건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수	100	115내외	15내외
<규제완화 등>	47.4	50~52.4	2.5~5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44.9	46~47.4	1~2.5
○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	2.5	4~5	1.5~2.5
<신규제도도입 및 확대>	16	22~23.5	6~7.5
○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 신규제도 도입	-	1내외	1내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16	21~22.5	5~6.5
<재정성과 제고>	36.5	40.9~41.3	4.4~4.8
○ 사회서비스일자리(돌봄 등) 확충(재정지원)	7.2	8.2내외	1내외
○ 탈빈곤 일자리(자활근로·광역자활공동체 기업화)	4.8	6.8~7	2~2.2
○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5	25.9~26.1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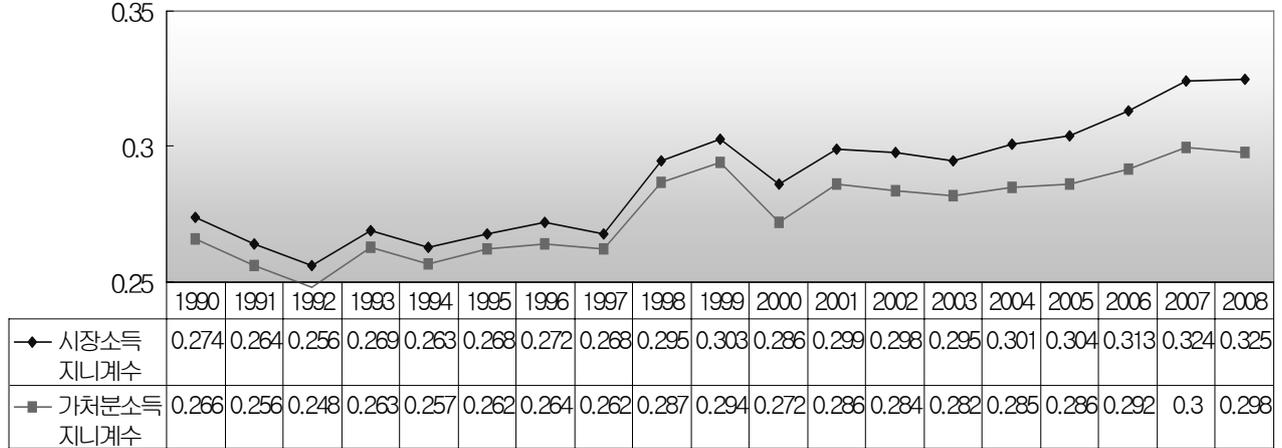
□ 평가 및 과제

-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실업을 및 청년실업율,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용없는 성장’ 현상 심화
- 제조업과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효과와 사회통합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
- 다만, 보건복지 일자리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며 낮은 임금과 처우수준 등 ‘질낮은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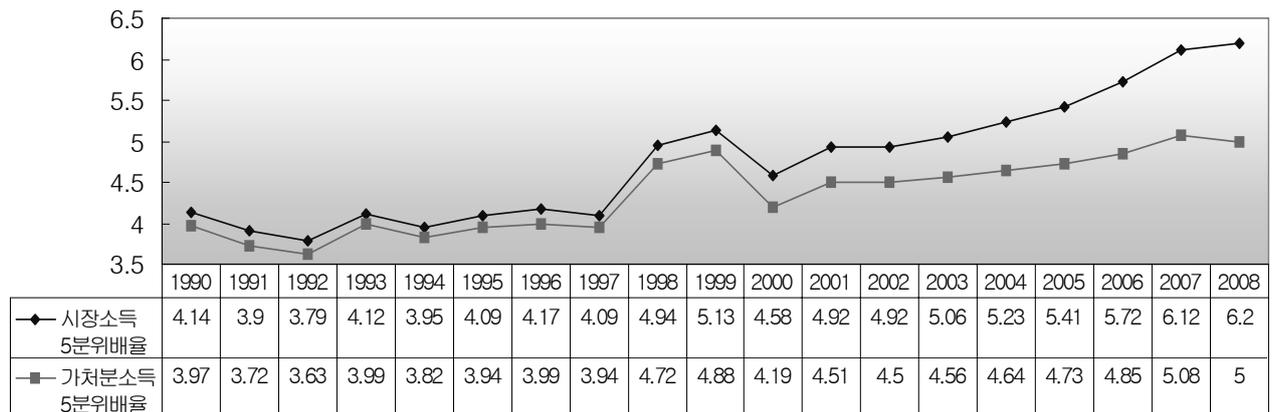
4. 보건복지관련 지표 동향

가. 분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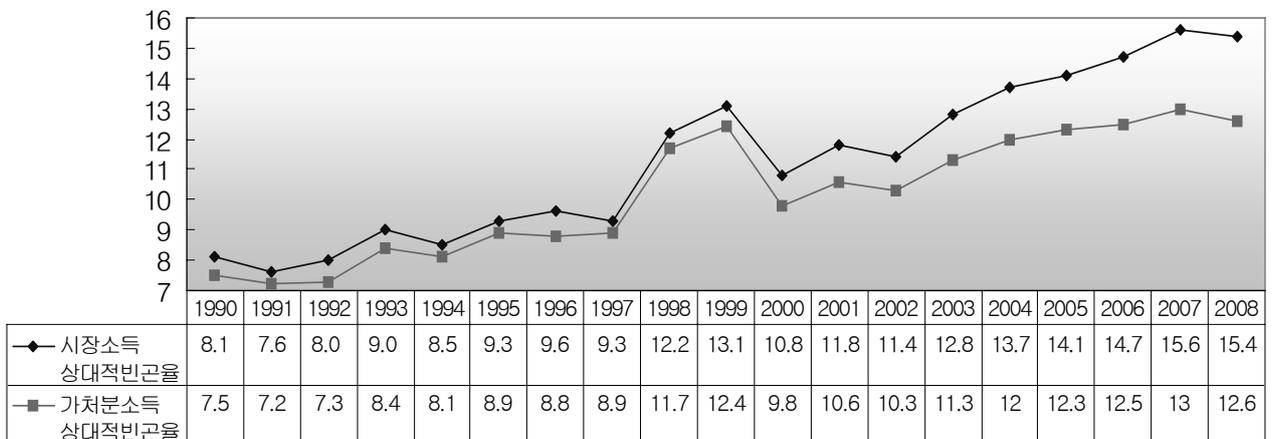
자녀계수(도시가구 기준)



5분위배율(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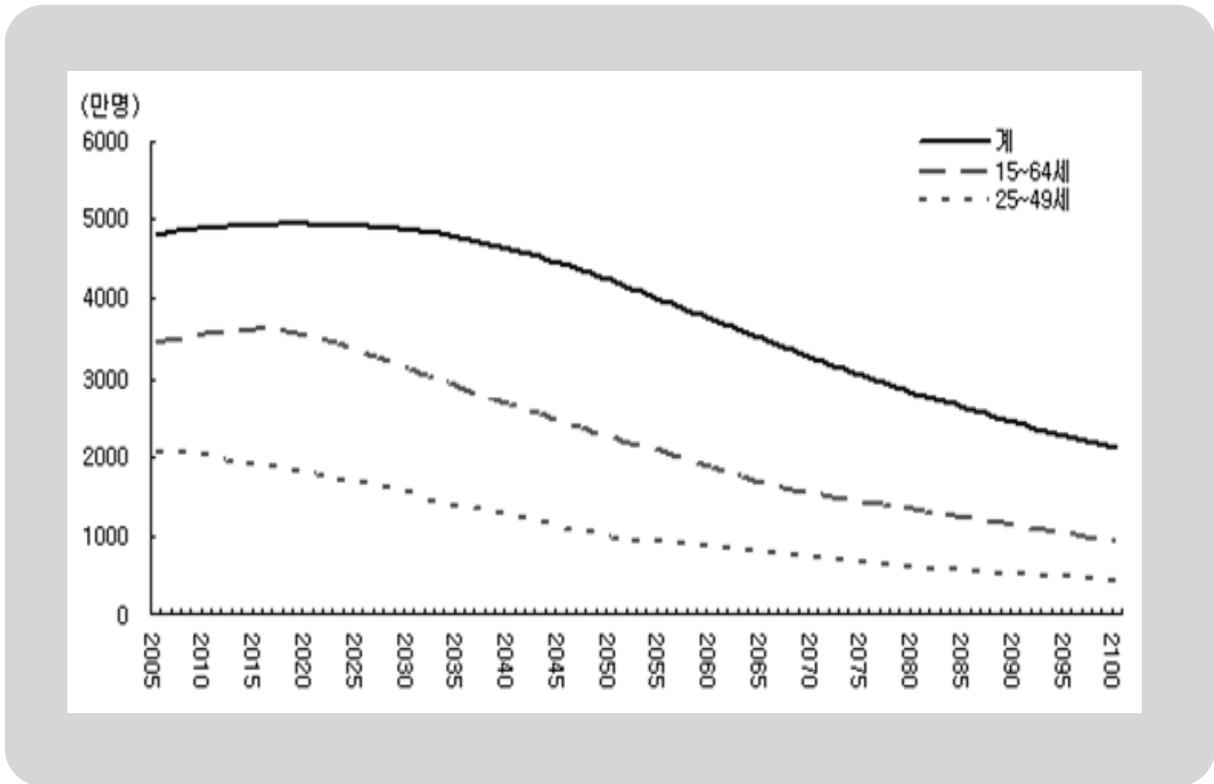


상대적빈곤율(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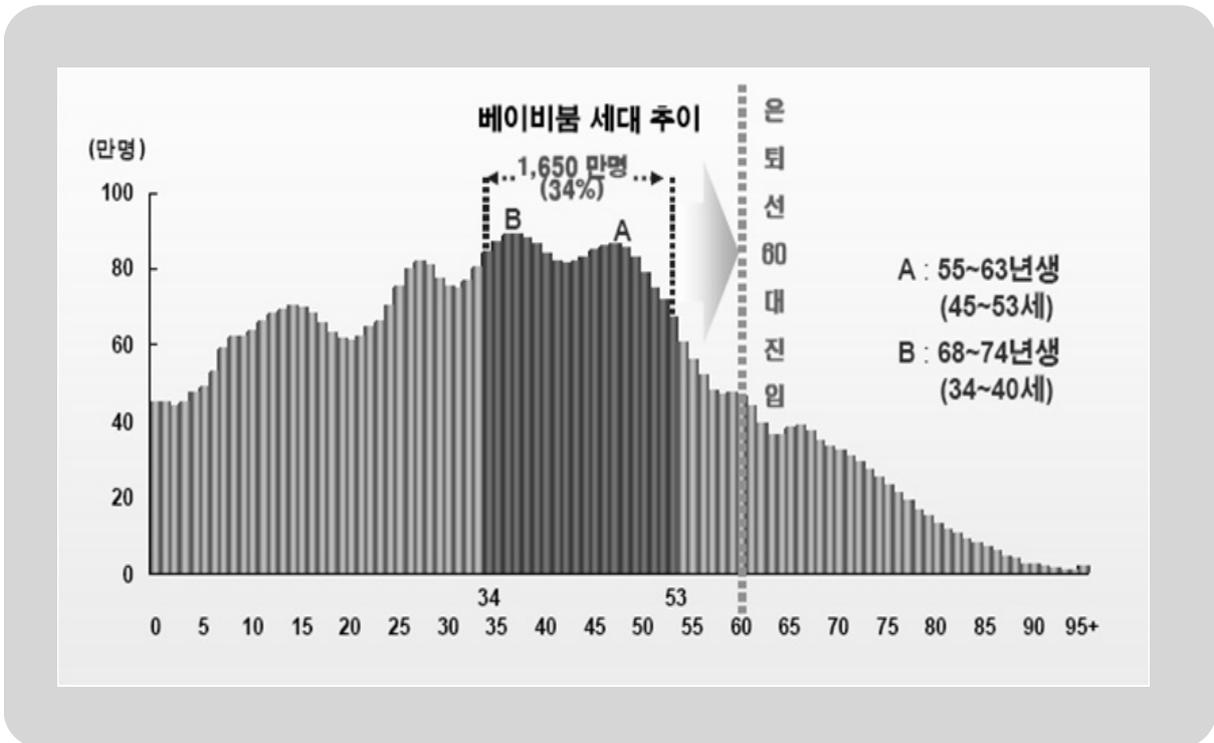


나. 합계출산율 및 인구추계

- 현재 출산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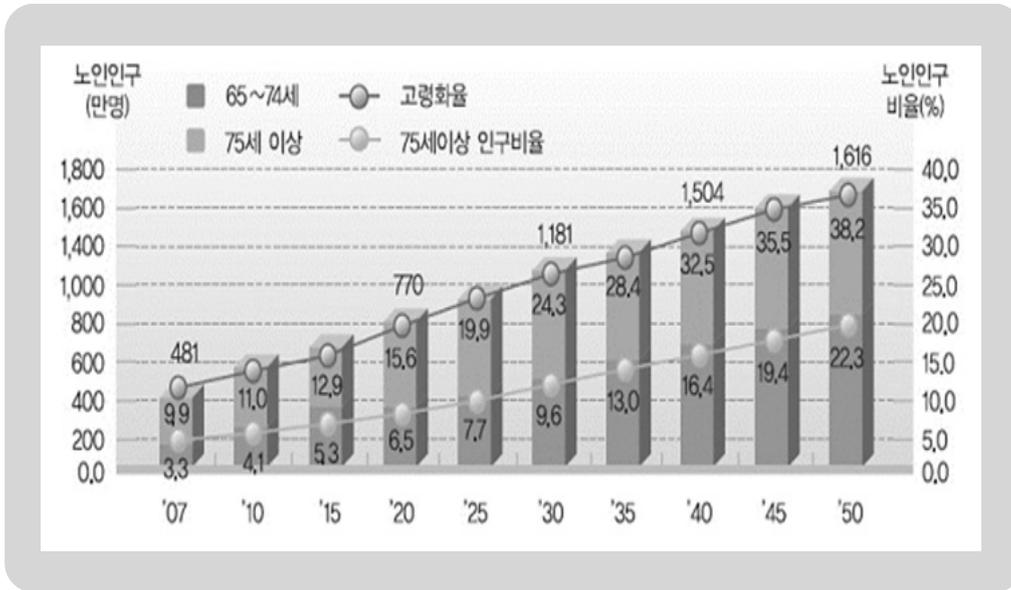
-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예상



다.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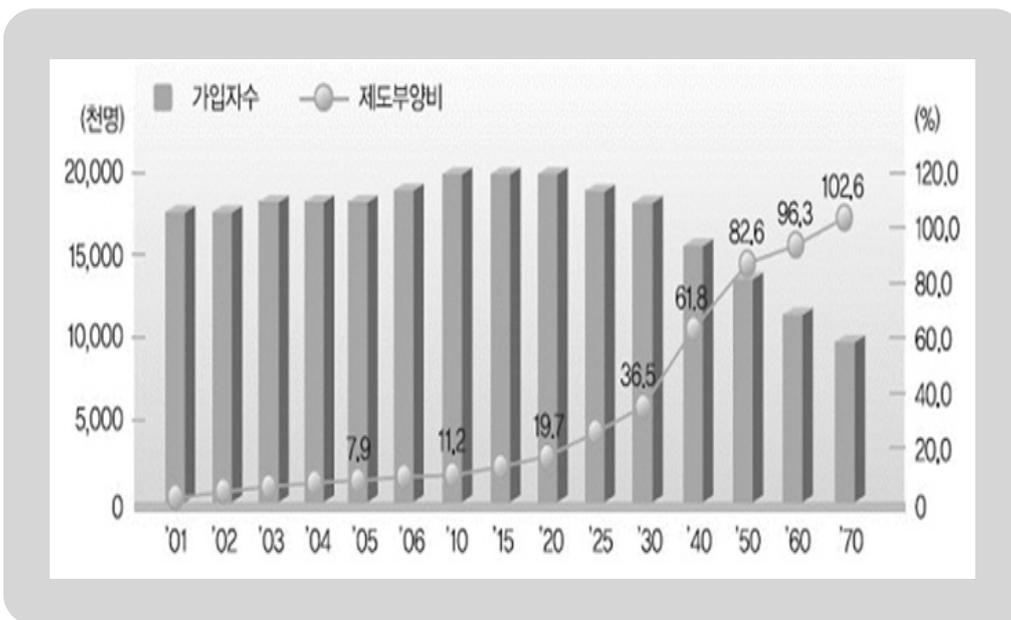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율은 2050년 3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에는 노인인구(659만명)가 유소년인구(654만명)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전망

○ 200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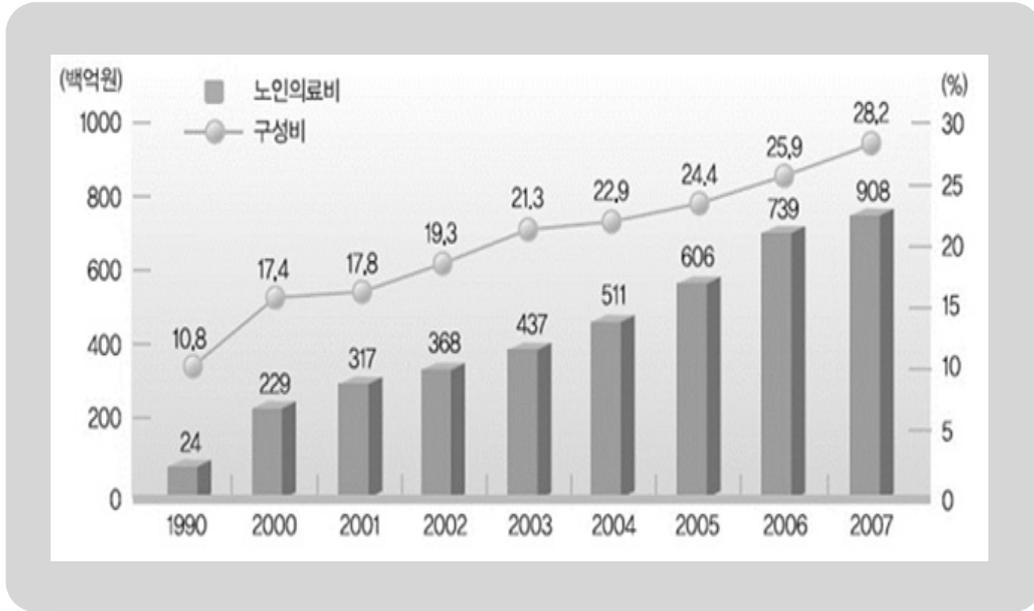
□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 가중 예상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나, 노령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0년에는 제도부양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제기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로 크게 증가할 전망
- 200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9.2%인 반면, 이들의 진료비 비중은 28.2%이며, 1인당 진료비도 전체 평균에 비해 3.1배 높은 수준



라. 고용률 및 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12월 대비 48만 1천명 증가하였고, 이 중 구직단념자는 17만 6천명으로 2만 9천명 증가
- 2009년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고, 청년실업률은 8.1%p로 전년대비 0.9%p 상승

	2007	2008	2009	2010(목표)
취업자 증감(만명)	28	15	△7	25+ α
고용률(%)	59.8	59.5	58.6	58.7내외
실업자(만명)	78	77	89	80 초반
실업률(%)	3.2	3.2	3.6	3 초반

● ● ●
금번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응 및 과제

● ● ●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장)



금번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응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목 차

- I. 한국의 정책대응 및 성과
- II. 2010년 주요 과제

목 차



I. 한국의 정책대응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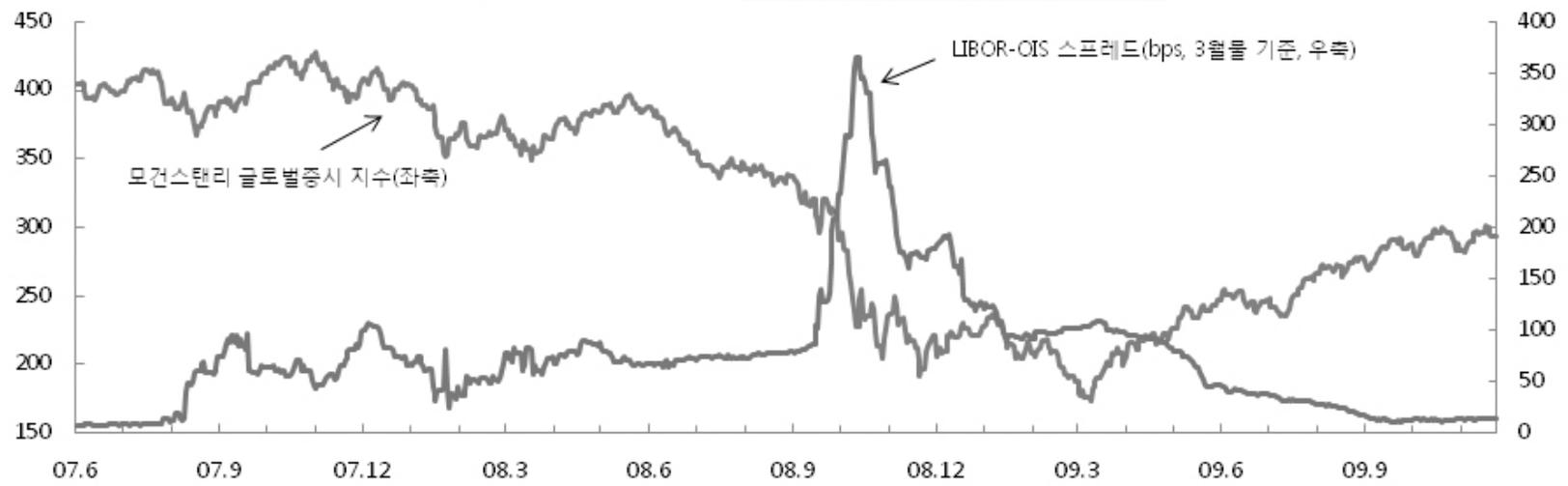
II. 2010년 주요 과제

글로벌 경제위기 개관



1단계 [07.6~08.3 중순]	2단계 [08.3 중순~08.9 중순]	3단계	4단계 [08.10말~09.3 중순]	5단계 [09.3 중순 이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손실이 기타 금융부문으로 확산 유동성 리스크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손실 급증 우려 확대 신용리스크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물경기 침체로의 전이 심화 주가 등 자산가격 급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조 및 선제적 정부정책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 증대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 다만 세계경제불안요인 여전히 상존

• 베어스틴스 매각
 • 리먼브라더스 파산
 • 글로벌 금융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



자료: BIS(2009.6)

한국의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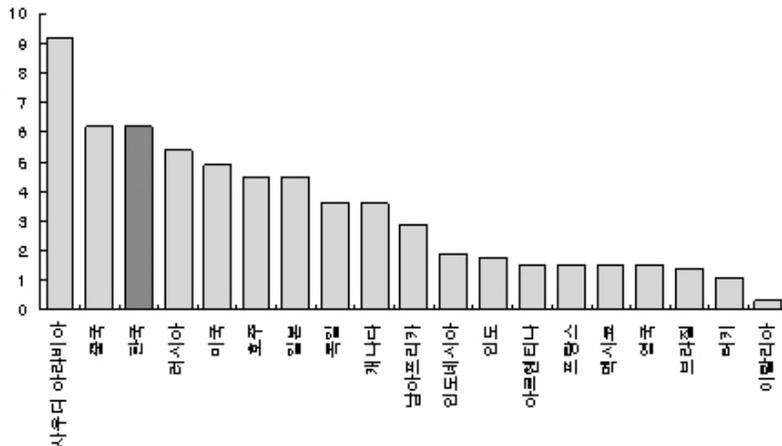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재정·통화·금융·외환정책 전 부문에 걸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
 - 정부는 적극적 경기부양책 실시, 금리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 선제적 금융시장안정정책과 더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노력
- ◆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경험 등을 토대로 주요국과 차별되는 선제적·효율적 정책가동체제를 구축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포하고 매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금년 1.8일부터 현재까지 39회에 걸쳐 개최)하여 재정 조기집행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
 - 연초에 하는 부서업무보고를 2008년말 완료하는 한편 예산안 국회 통과직후 예산을 배정하여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
- ◆ 또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체결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적 정책협력체제를 강화

재정정책 :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

- ◆ 우리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가계소득 지원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
- ◆ 특히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인 조기집행으로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주요국 2008~10년 경기부양 규모 비교

(2007년 명목GDP 대비, %)



자료 : IMF

연도별 위기대응 재정지원 집행실적 및 계획

[%, 2008년 GDP 대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08년	1.1	1.2	0.2	0.0	0.1	0.7
09년	3.8	2.1	1.6	1.5	3.5	2.9
소계	4.9	3.3	1.8	1.5	3.6	3.6
10년	2.0	2.4	0.1	1.7	1.2	1.8
합계	6.9	5.6	1.9	3.2	4.7	5.4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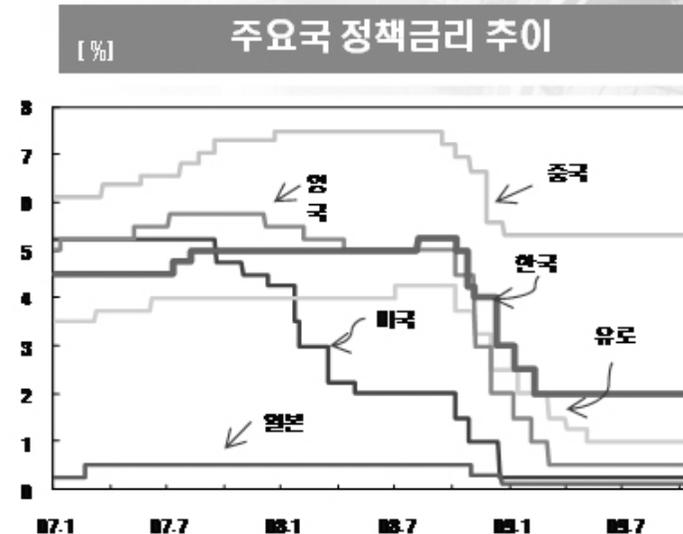
통화정책 : 금리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



◆ 한국: 신속한 금리인하

5.25%(2008.10) ⇒ 2.0%(2009.2월 이후)

- 미국: 5.0 ~ 5.25%p 인하
(2007. 9: 5.25% → 현재: 0.0 ~ 0.25%)
- 영국: 5.25%p 인하
(2007.12: 5.75% → 현재: 0.5%)
- 유로: 3.25%p 인하
(2008.10: 4.25% → 현재: 1.0%)



◆ 한국: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기관, RP기간 확대, 경쟁입찰방식 외화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 미국: 금융기관 대상 유동성 공급제도, 지준부리제도, 민간신용공여 프로그램 도입, 금융기관 직접신용제공 등 시행
- 영국: 상설할인제도 도입 및 대출담보 범위 확대 등
- 유로: 할인창구 대상채권 종류, 신용등급, 표시통화 등 확대

금융정책 : 선제적 금융시장안정정책 실시

◆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중소기업대출 연장 등 금융시장안정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

-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시장안정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등 조성
 -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및 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금융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펀드 조성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
 -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은행권의 모든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 금감원과 은행간 MOU를 통한 목표중기대출비율(50.4%) 설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기준 및 절차를 완화
 - 금년말까지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
 - 중소기업 보증비율을 85% 수준에서 95~100% 수준으로 확대
- 기업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 선박,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조기 자금지원체제 구축

외환정책 : 다각적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

- ◆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2008년 4/4분기에 자본수지에서 418억달러 유출되는 등 외화유동성 경색이 심화
 - 자본수지 유출 규모: 2008.10월(-248.3억달러), 11월(-121.4억달러), 12월(-48.3억달러)
(억/달러)
- ◆ 이에 대응하여 외환당국은 총 516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신속히 공급
 -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 : 2008.10월 ~ 12월중 270억달러
 - 수출입금융을 위한 외화유동성 지원 : 2008.12월중 82억달러
 - 한미통화스왑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 2008.12월 ~ 2009.1월중 164억달러
- ◆ 또한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2008.10.19) 도 실시
 -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시중은행을 지원

국제공조 : G-20 논의에 적극 참여

- ◆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에 노력
-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G-20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 금융감독 및 규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틀을 마련
 - 세계경제성장과 고용회복을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및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에 합의
 - 금융안정포럼을 확대 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신설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금융감독 및 규제체계 개선을 도모
 -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국 및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및 지배구조를 개혁하기로 합의
- ◆ 우리나라는 G-20 차기의장국 위치에서 G-20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확립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는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Standstill 재확인 및 연장,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 등 의제 설정과 함께 부실자산처리 관련 방안 제시 등을 통해 G-20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공헌

정책효과: 빠른 경기회복세 시현



◆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시현

- OECD 30개국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08.4/4분기중 29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09.1/4분기 3위, 2/4분기 및 3/4분기 2위로 급상승

◆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잇달음

- IMF(09.8월) “한국정부가 종합적이며 시의적절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화 대책을 단행한 데 힘입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
- 피치사(09.9월) “한국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거시경제지표 및 외화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용등급전망을 상향조정”
- OECD(09.10월)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증대로 OECD국가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중 하나”

정책효과: 빠른 경기회복세 시현



OECD 국가 성장률 비교

(전기대비, %, 계절조정)

08.4/4		09.1/4		09.2/4		09.3/4		09.4/4	
아이슬란드	3.2	호주	0.6	터키	2.8	룩셈부르크	4.2	슬로바키아	2.0
슬로바키아	0.6	폴란드	0.1	한국	2.8	한국	3.2	미국	1.4
노르웨이	0.0	한국	0.1	일본	1.3	멕시코	2.9	일본	1.1
폴란드	-0.1	노르웨이	-0.7	슬로바키아	1.2	터키	1.8	프랑스	0.6
스위스	-0.6	스웨덴	-0.8	호주	0.7	슬로바키아	1.6	오스트리아	0.4
체코	-0.7	뉴질랜드	-0.8	포르투갈	0.6	노르웨이	0.9	네덜란드	0.3
그리스	-0.7	스위스	-0.9	폴란드	0.5	체코	0.8	한국	0.2
호주	-0.8	룩셈부르크	-0.9	독일	0.4	벨기에	0.7	영국	0.1
뉴질랜드	-0.9	그리스	-1.0	프랑스	0.3	독일	0.7	독일	0.0
캐나다	-0.9	프랑스	-1.4	스웨덴	0.3	덴마크	0.6	포르투갈	0.0
스페인	-1.1	덴마크	-1.4	뉴질랜드	0.2	포르투갈	0.6	스페인	-0.1
네덜란드	-1.2	캐나다	-1.6	체코	0.2	이탈리아	0.6	이탈리아	-0.2
오스트리아	-1.3	스페인	-1.6	벨기에	-0.1	미국	0.6	헝가리	-0.4
미국	-1.4	미국	-1.6	미국	-0.2	오스트리아	0.5	체코	-0.6
프랑스	-1.5	벨기에	-1.7	멕시코	-0.3	네덜란드	0.5	그리스	-0.6
포르투갈	-1.7	포르투갈	-2.0	핀란드	-0.3	폴란드	0.5	-	-
영국	-1.8	아일랜드	-2.1	스위스	-0.3	아일랜드	0.3	-	-
이탈리아	-2.1	오스트리아	-2.2	그리스	-0.3	핀란드	0.3	-	-
벨기에	-2.1	네덜란드	-2.3	아이슬란드	-0.4	스위스	0.3	-	-
헝가리	-2.3	헝가리	-2.3	이탈리아	-0.5	뉴질랜드	0.2	-	-
멕시코	-2.4	영국	-2.5	오스트리아	-0.5	호주	0.2	-	-
독일	-2.4	이탈리아	-2.7	아일랜드	-0.6	스웨덴	0.2	-	-
덴마크	-2.5	일본	-3.2	영국	-0.7	프랑스	0.2	-	-
일본	-3.0	독일	-3.5	캐나다	-0.8	캐나다	0.1	-	-
룩셈부르크	-3.1	터키	-3.8	노르웨이	-0.9	일본	0.0	-	-
핀란드	-4.41	체코	-4.4	스페인	-1.1	영국	-0.2	-	-
터키	-4.2	핀란드	-4.9	네덜란드	-1.1	스페인	-0.3	-	-
스웨덴	-4.8	아이슬란드	-5.1	헝가리	-1.4	그리스	-0.5	-	-
한국	-5.1	멕시코	-6.4	덴마크	-2.3	헝가리	-1.2	-	-
아일랜드	-5.4	슬로바키아	-8.1	룩셈부르크	-2.7	아이슬란드	-5.7	-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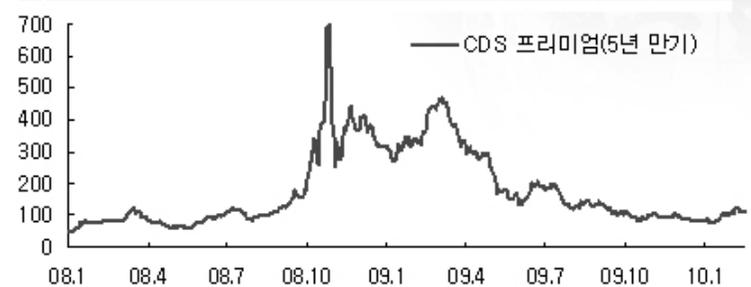
정책효과: 대외신인도 회복

◆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리먼사태 이전으로 복귀

-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리먼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
 - 09.2월에 437bp 수준으로 상승하였던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10.2월에는 111bp 수준으로 하락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금융위기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08.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로 조정하였던 Fitch사도 09.9.1일 다시 stable로 환원
 - * Fitch사는 금년도에 신용등급 및 전망을 27건 하향 조정한 반면 상향조정은 단 두건(한국, 우루과이)에 불과(투자적격 이상인 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

한국 CDS 프리미엄 및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bp]



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S&P[21등급]	Moody's[21등급]	Fitch[24등급]
	AAA	Aaa	AAA
	AA+	Aa1	AA+
	AA	Aa2	AA
	AA-[외환위기前]	Aa3	AA-[외환위기前]
투자적격	A+	A1[외환위기前]	A+[05.10.24 ~ 현재]
	A1[05.7.27 ~ 현재]	A2[07.7.25 ~ 현재]	A1[02.6]
	A-[02.7]	A3[03.2]	A-
	BBB+[01.11]	Baa1	BBB+[00.3]
	BBB [99.11]	Baa2[99.12]	BBB[99.6]
	BBB- [99.1]	Baa[99.2]	BBB- [99.1]
투자부적격	BB+ ~ D(SD)	Ba1 ~ C	BB+ ~ D

정책효과: 대외부문 선순환 구조 정착

- ◆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
 - 경상수지가 작년 2월부터 흑자를 지속하여 2009년중 426.7억달러 흑자를 시현
 - 외환보유액은 2008.11월말에 2,005억달러 수준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1월에 2,737억달러를 기록

- ◆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순채권국가로 전환되고 단기외채 비중이 축소되는 등 대외부문에서 선순환 구조가 정착
 -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은 2009.9월말 29.8억달러로 2008.9월말(-235.2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 우리나라 대외채무중 단기외채비중이 2008.9월말의 44.5%에서 2009.9월말에 36.8%로 하락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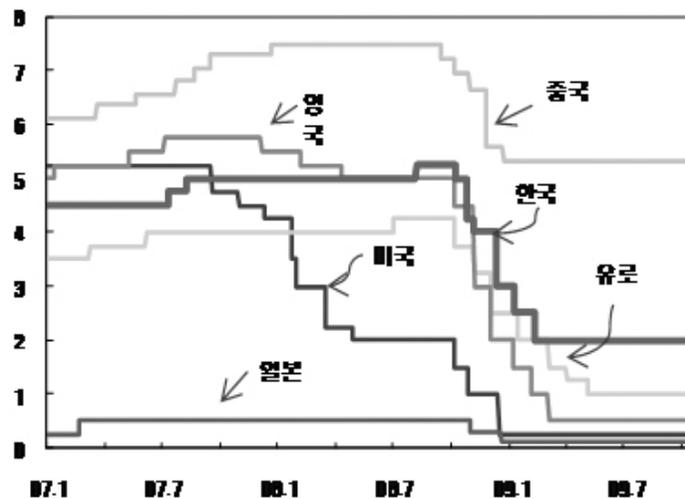


- I. 한국의 정책대응 및 성과
- II. 2010년 주요 과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 정책대응 여력 제약

-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난 정부부채로 인한 세수증대 필요성,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의 소비 및 투자활동이 구축될 우려
- ◆ 특히 제로금리까지 도달한 통화정책의 추가적 대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부채 과다는 향후 하방리스크 실현시 정책대응 여력을 크게 제약

< 주요국 정책금리 >



< 국가채무비율 >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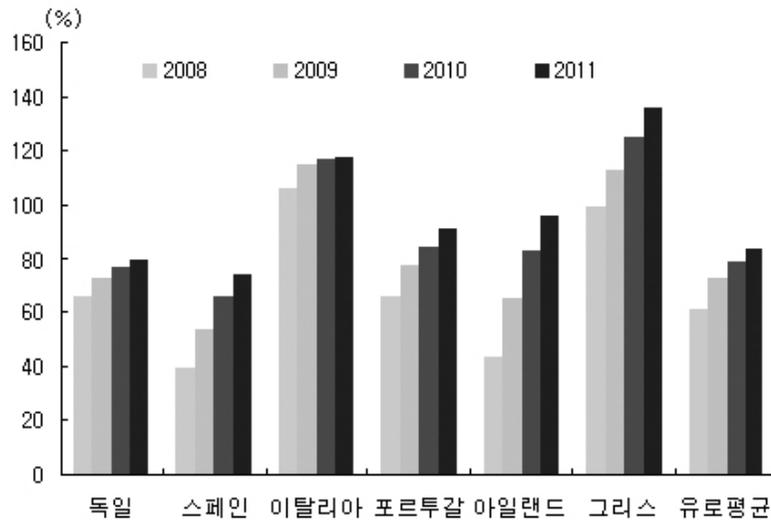
	2007	2008	2009e)	2010e)	2014e)
미국	61.9	70.4	84.8	93.6	108.2
일본	187.7	196.6	218.6	227.0	245.6
독일	63.4	67.1	78.7	84.5	89.3
영국	44.1	51.0	68.7	81.7	98.2
한국	29.6	-	34.9	39.4	35.4
중국	20.2	-	20.2	22.2	20.0

자료: IMF(2009.11월)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 유로지역 재정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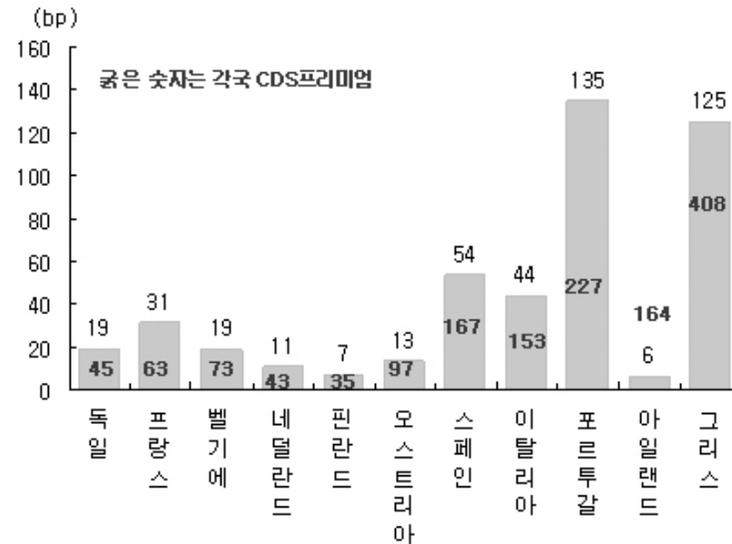
- ◆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의 과다채무 문제가 유로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될 우려

〈 유로지역 주요국의 정부부채 〉



자료 : European Commission('09.10월 경제전망보고서)

〈 2010년중 유로국가 CDS 프리미엄 상승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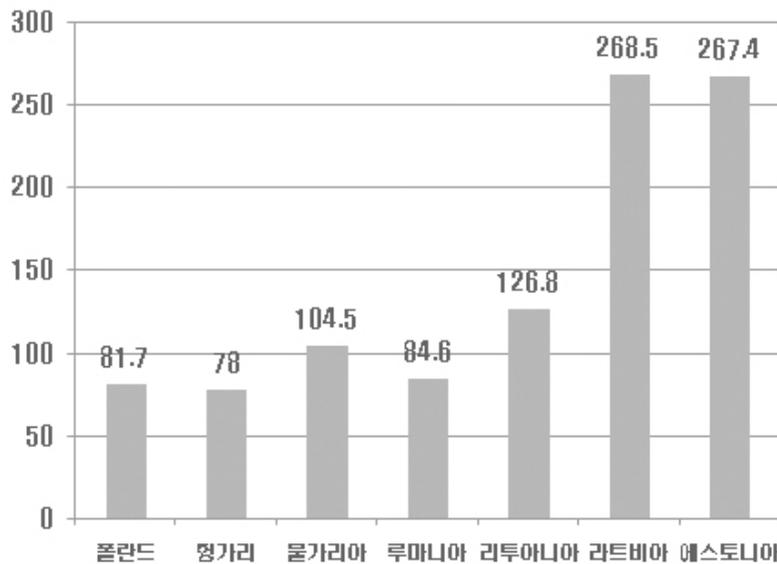


주 : '10.1.1~2.5일중
자료 : Bloomberg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 동유럽 단기외채

◆ 동유럽 금융불안이 제 2의 두바이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 잠재

〈 동유럽 주요국의 단기외채 비율 〉



주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자료 : IMF GFSR(2009.10월), IMF WEO(2009.10)

〈 동유럽 주요국 금융지표 및 성장률 전망 〉

	대외 금융지표		경제성장률 전망 ²⁾	
	2010년 리파이낸싱 대상 외채 ¹⁾	GDP대비 순대외 포지션	2009	2010
불가리아	155	-31	-6.5	-2.5
에스토니아	346	-64	-14.0	-2.6
헝가리	107	-46	-6.7	-0.9
라트비아	238	-51	-18.0	-4.0
리투아니아	210	-39	-18.5	-4.0
폴란드	158	-17	1.0	2.2
루마니아	111	-31	-8.5	0.5

주 : 1) 외환보유액 대비
 2) 음영은 마이너스 성장
 자료 : IMF GFSR(2009.10월), IMF WEO(2009.10)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 낮은 것으로 전망



◆ 국제공조 및 지원체계 강화, 유연한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더블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금년중 3%대 , 2011년 4%대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

	세계	선진국	신흥시정국			신흥시정국	중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7년 ¹⁾	5.2	2.7	2.1	2.3	2.7	8.3	13.0
2008년 ¹⁾	3.0	0.5	0.4	-1.2	0.6	6.1	9.6
2009년							
IMF	-0.8	-3.2	-2.5	-5.3	-3.9	2.1	8.7
World Bank	-1.7	-4.2	-3.0	-6.8	-4.5	1.2	7.2
2010년							
IMF	3.9	2.1	2.7	1.7	1.0	6.0	10.0
World Bank	2.8	1.3	1.8	1.0	0.5	4.4	7.7
2011년							
IMF	4.3	2.4	2.4	2.2	1.6	6.3	9.7
World Bank	4.0	2.4	2.5	2.0	1.9	5.7	8.5

주 : 1) IMF 및 각국 통계 기준 자료 : IMF(2010.1월), World Bank(2009.6월)

출구전략: 국제적 논의 내용

◆ 시기에 관한 논의

- IMF(2009)는 『금융안정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출구전략 실시를 제안
- 반면 유럽중앙은행(2009)은 각국이 경기회복에 맞추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

◆ 방법에 관한 논의

- 선진국의 경우 자산가격 및 인플레이 상승 압력은 낮은 반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정상화보다는 재정정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신흥시장국의 경우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신용버블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재정정책과 병행 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공조에 관한 논의

- 국가별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속도,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 등에 차이가 있어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은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
- 그러나 개별 국가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방법이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요구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 ◆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금융부채가 계속 확대
- ◆ 또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미미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
- ◆ 이에 따라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책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향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복구, 금융시장의 안정정착 등 실물 및 금융시장의 여건을 면밀히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과제

-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경험의 활용, 정부의 적극적·선제적 정책대응,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대내외정책 강화 등에 힘입어 금번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향후 우리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높은 대외의존도,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함으로써 대내적 건전성 및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
 - 대내적으로는 은행 예대율의 적정 수준 유도, 가계 및 기업부문의 건전성 제고, 자산버블의 방지,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통한 내수확대 등에 주력
 - 이와 함께 은행 단기외채비율 축소, 정책운용의 신뢰성 및 일관성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방지 등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

향후 과제

- ◆ **국내적 정책노력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 안정 및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를 계기로 중앙은행간 금융안정망 구축,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관련 Safety Net 구축, 보호무역 확산 방지, 개도국 지원 강화 등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 ◆ **향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과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

● ●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 ●

정 기 영
(삼성경제연구소장)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정 기 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 외국과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비교와 성과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신속한 재정 확대를 저금리 정책이 보조하여 경기위축을 억제한 것이 한국 경제 회복의 추동력이었다. 또한, 금융위기 초반에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으로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한 것이 주요했다. 일자리 나누기로 대규모 실업을 방지한 것도 시장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재정 정책은 초기에 집행되어 그 성과가 더욱 뚜렷하였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경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2008년 7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확장되는 상황에서도 재정 투입을 꺼리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 겨우 재정확대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압력으로 인해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고, 미국의 적극적 재정확대 법안도 정치권의 견해 차이로 2009년 2월이나 되어서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닌 한국은 2008년 4분기에 들어서야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2009년 예산을 수정하면서 10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을 결정했고 2009년 3월 사상 최대 규모인 28.9조 원(GDP대비 3.0%)의 추경편성으로 재정 투입을 가속화 했다. 통화정책도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 사이에 기준 이자율을 5.25%에서 2.00%로 낮추어 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였다.

적기에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국은 2009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적자(GDP대비 -8.2%)보다 적은 재정적자(GDP대비 -5.0%, 관리대상수지 기준)로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2008년 4분기에만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을 뿐, 2009년 1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반면 2007~2009년간 3~8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OECD 선진국들의 성장률 반전은 2009년 3분기 이후에나 시작되었다.¹⁾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2010년 성장률은 발표기관에 따라 4.4~5%로 예상되는데, OECD 국가들은 평균 1.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적극적 경기부양책에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2009년 소비자 물가가 4.7%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8% 증가²⁾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0년 GDP의 36.1%로 억제되어 OECD 평균인 97.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³⁾ 다만 지난 2년간 98.9조 원이 증가한 국가채무가 원리금 상환에 따르는 지출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

■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와 보강해야할 점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초 심각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다. 2008년 월평균 14.5만 개(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일자리가 2009년 1월에는 10.3만 개 감소하였다. 이러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감원 대신 휴업, 훈련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 둘째,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일 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했다. 셋째, 청년층 뉴스타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민간위탁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위기대응은 상용직⁴⁾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을 통해 임시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추경예산 집행이 본격화된 6~11월 중 임시직 일자리는 월평균 14.1만 개 증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수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09년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내수 침체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부진하면서 영세자영업의 도산과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최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다. 상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도 없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1) 연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 2009년 평균 -3.5%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한국은 0.2%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음

2) 삼성경제연구소 전망

3) 또한 한국은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2009년 2분기 현재 2.8%에 불과하여 국가채무가 누적되어도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4) 고용기간이 상용직은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보완하려면 구직자와 구인자 간 노동중개기능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던 2009년 하반기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이 2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도산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실직한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괜찮은 중소기업과 연결 시켜줌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노동중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영세한 민간고용서비스 기업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출구전략 및 더블딥의 가능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확장적 정책기조를 되돌리는 출구전략은 시기(Timing)와 신호(Signal)가 중요하다. 먼저 출구전략의 시기는 국내, 세계경제의 회복과 미국 등 주요국의 출구정책 시행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물론 출구전략이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및 국가채무에 대한 의구심 증폭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선진국의 고용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한국경제도 금년에는 개선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고용과 내수를 개선하기 전 너무 빠른 출구전략은 1990년대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더블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작고 개방된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금리, 환율 등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거시정책은 주요국을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선진국보다 먼저 출구전략을 실시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기가 중요하며, 당분간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재할인을 인상이나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비해 9조 원이 감소한 2010년 예산부터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각종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에 있어서 또한 정부의 신호가 중요하다. 출구전략의 효과는 경제주체의 예상과 반응에 달려있다.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단기간에 출구전략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경우, 출구전략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증폭시킨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적은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지속적이고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시장은 정책당국의 현재 정책만큼이나 미래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의 성과와 과제



허 찬 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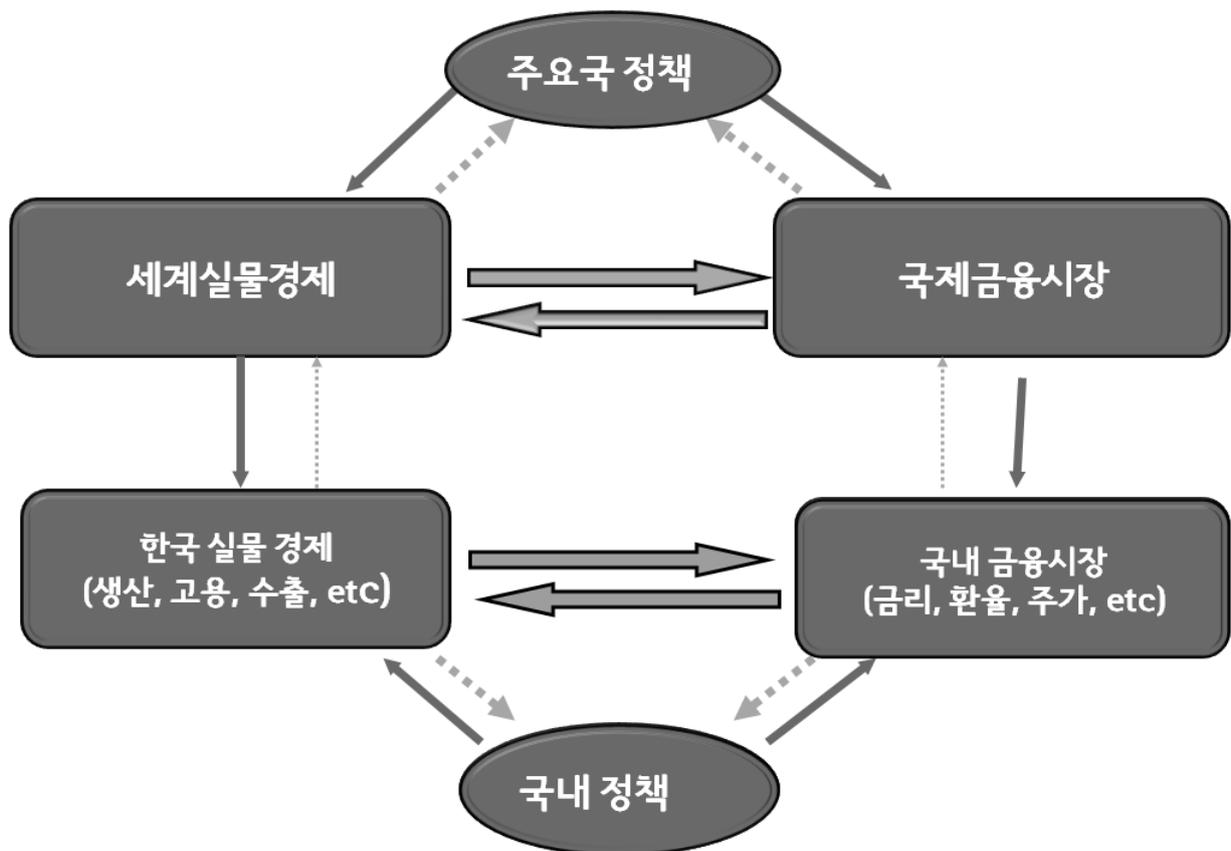
우리경제의 성과와 과제

허 찬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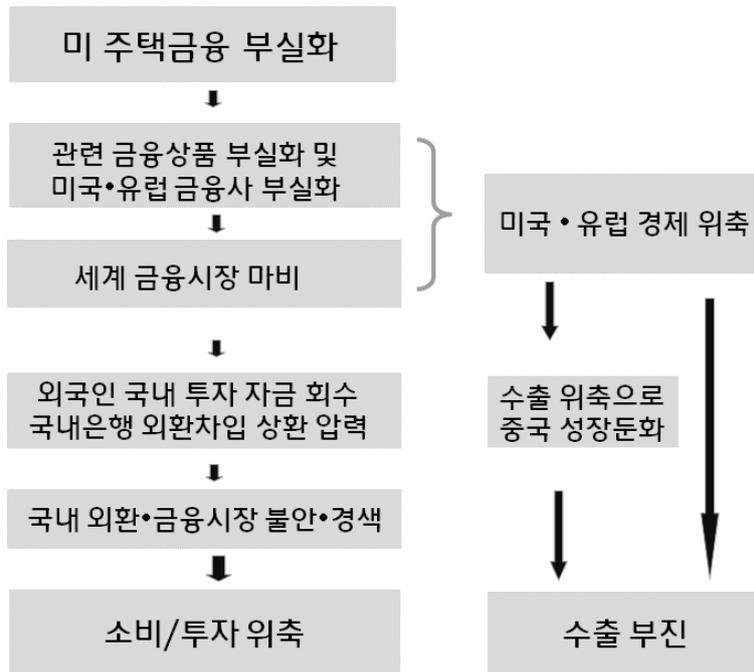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1. 대외여건, 세계경제

[그림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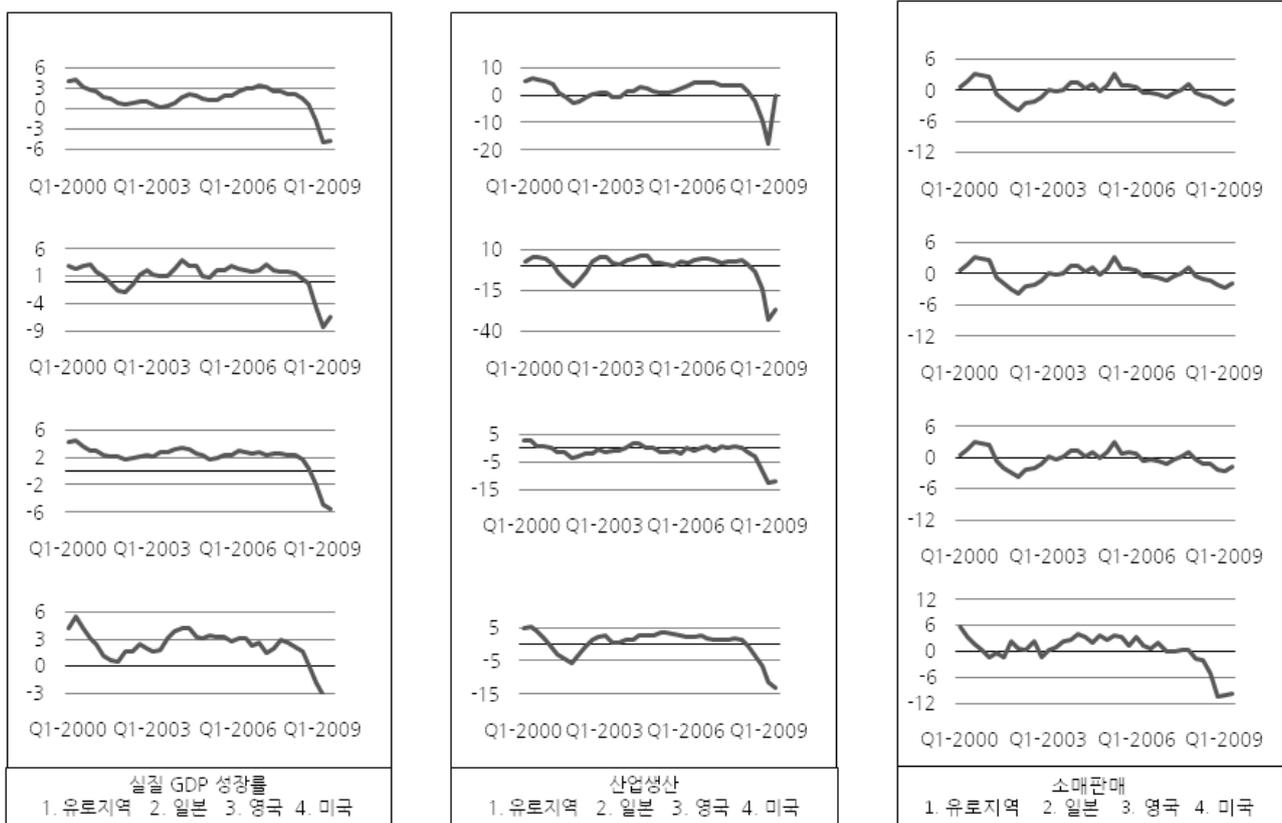


[그림 2]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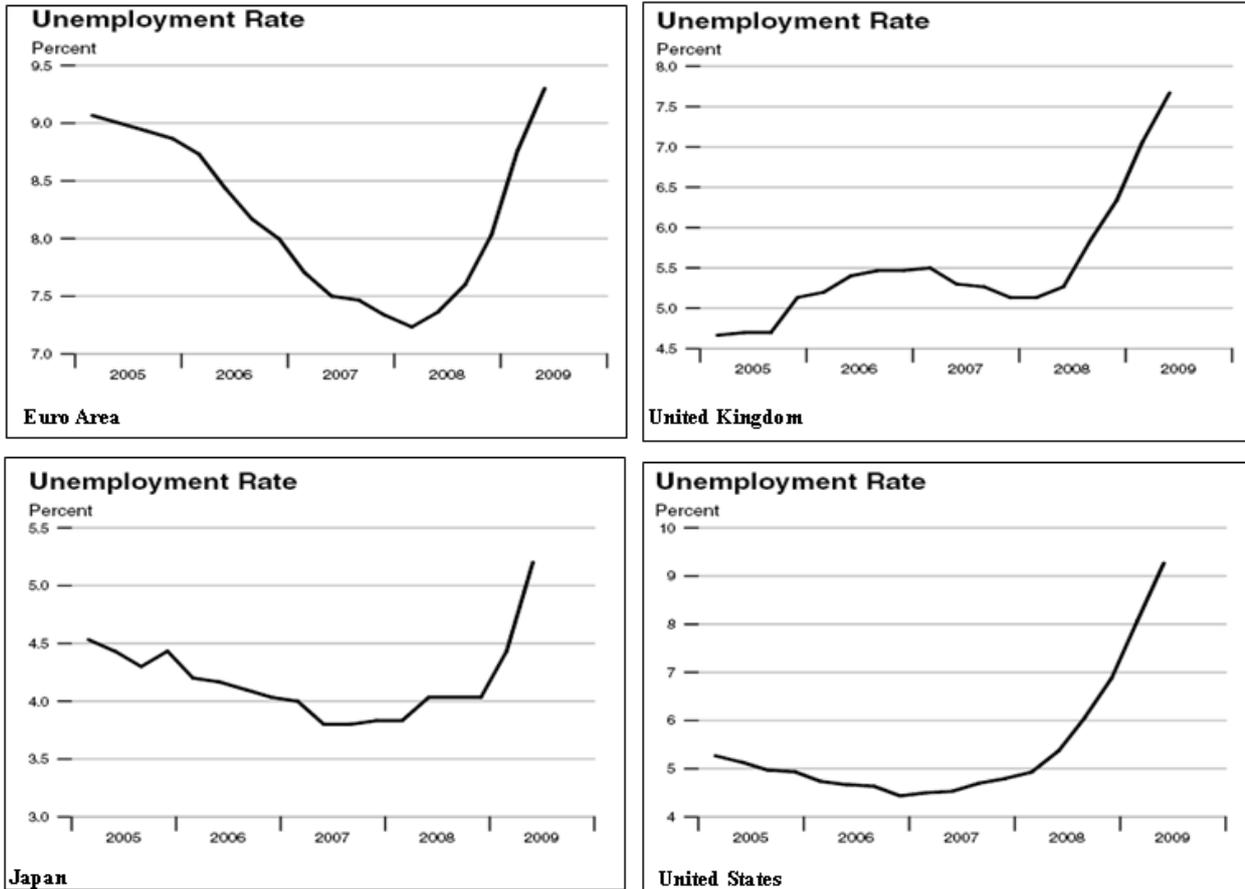


[그림 3] 놀라운 동시성 (incredible synchronization)

: 주요국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급락(2005Q1~2009Q1)



[그림 3] 놀라운 동시성 (incredible synchronization)
: 주요국 실업률 급증 (200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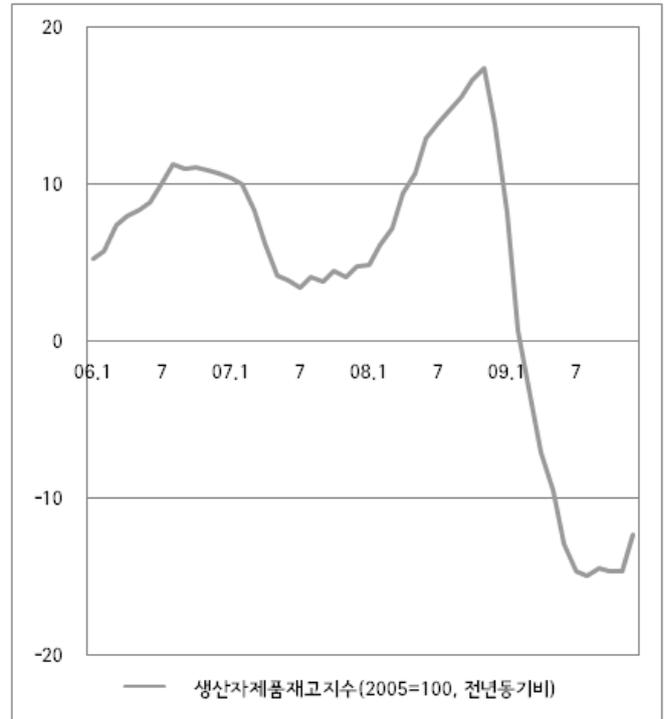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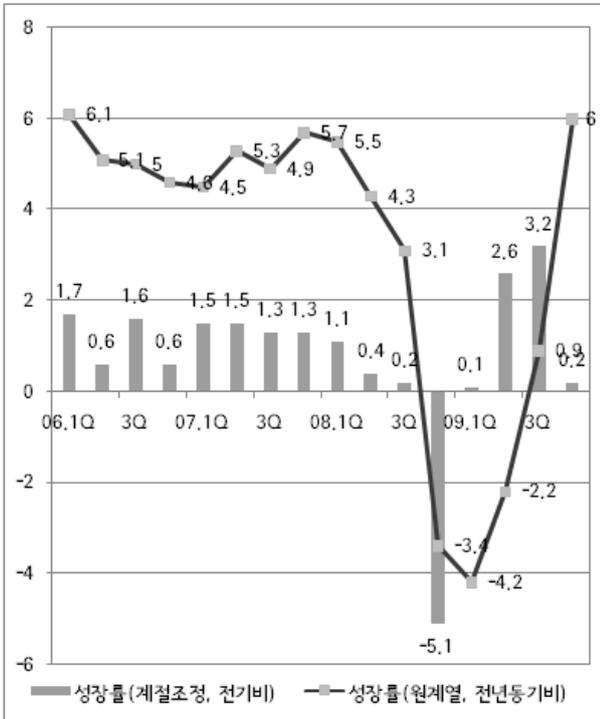
■ 대외여건, 낙관 경계해야

- 2008년 세계경제 하락 폭과 속도, 전례 없었음
- 심각한 더불딤 가능성 낮으나 폭락에 대칭한 모습의 회복은 불가능
- 2009년 극심한 금융위기의 부산물로 원화 환율 약세, 수출감소 완충했고 대외균형 흑자 유지에 기여
- 2010년 이후 위기상황 재연되면 중국경제도 약화되며 2009년의 G2 경제상황 분리 (decoupling) 기대 못 함
- 두바이, 그리스 같은 위기 잔불 재연과 세계적 금융산업재편, 중국경제 연착륙 등 난제 계속 부각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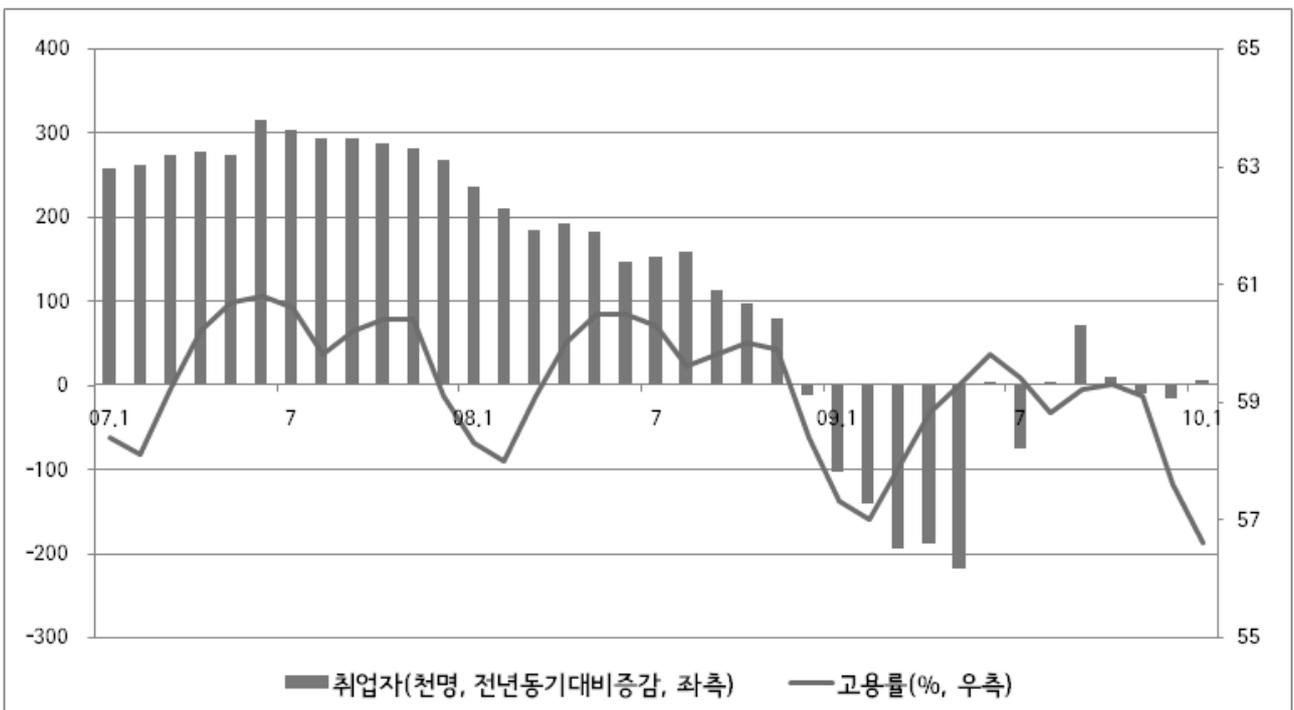
II. 대외여건, 세계경제

■ 2010년 전망

□ 쉬운 과제 : 재고조정 종식 및 반등 산업활동 개선(성장률 4%대 이상 달성)



□ 어려운 과제 : 고용추세 회복



■ 우리경제의 과제

- 고용회복 경기순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더 중요한 구조적 과제
- 1분기 이후 경제상황 개선 조짐 지속되면 점진적 금리인상 바람직
- 그리스 및 유럽국 재정문제의 교훈 : 투명한 재정이 꾀돌이(clever) 재정보다 바람직
- 단기 성과보다 2012년 우리경제의 견실한 모습을 목표로 정책 펼쳐야

● ●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 ●

김 종 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 종 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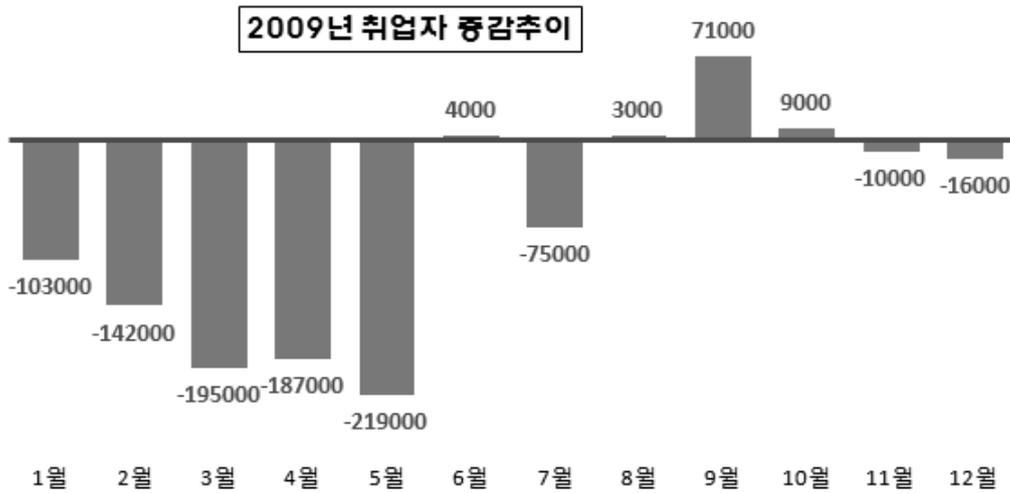
1. 한국경제에 대한 개괄적 평가

1. 경제위기 탈출 이후 경기회복

-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건국 이래 최대 302조 2천억 지출)과 최저금리정책(한은 기준금리 2%유지)으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에 힘입어서 2009년도 한국경제는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플러스 성장(GDP성장률 0.2%↑) 실현

2. 잠재된 경제 불확실성

-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경제위기는 벗어났으나,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등은 자산가격 거품이 우려(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시 상환부담 가중)
- 가계부채가 2009년 3/4분기, 총 712.8조원으로 실질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가계부도위협' 이 커짐
-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투자, 고용, 소득 등의 지표가 개선되어야 함. 정부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의 단기 저임금의 공공근로일자리로 고용을 유지했으나 민간부문 고용은 후퇴하였고 2010년에도 고용사정은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규노동시장 진입자가 쏟아지는 1/4분기는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임



(자료) 통계청

3. 고령화 사회 진행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장이 시작되어 경제의 활력 위축 우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기업정년을 60세로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5세 정년이 42.9%로 가장 많음.
- 노동부가 2007년, 기업 1,9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년 55세가 42.7%(611개)로 가장 많고, 정년 58세가 23.4%(333개), 60세 이상 정년이 16.5%(235개)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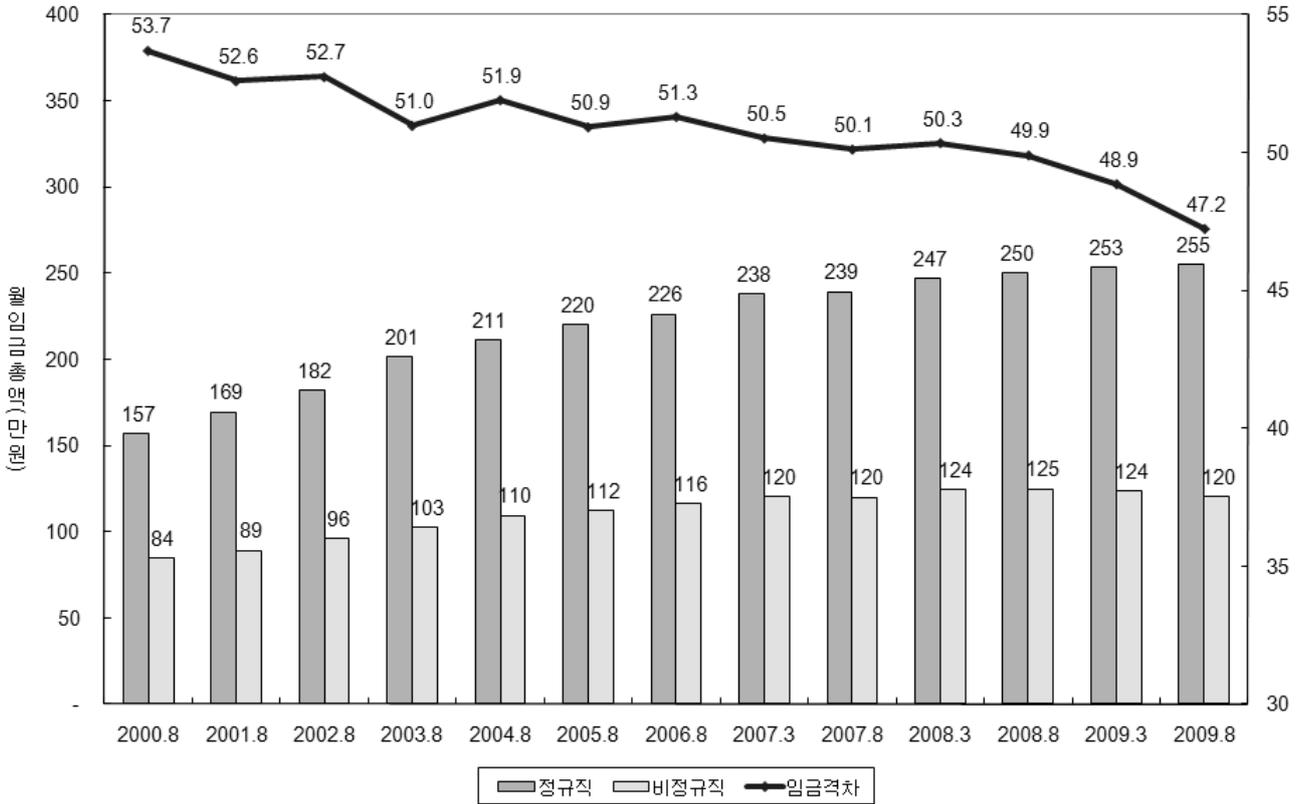
출 생 시 기	1955~1963년
규 모	712만명 (전체인구의 14.6%)
경 제 적 특 징	토지보유비중 42%, 건물비중58%, 주식보유비중 20%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은퇴 후 고용문제, 고숙련 대체 인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과 경쟁력 감소, 소득수준 하락으로 인한 저축 감소는 물론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를 초래 할 것임.

4. 지속되는 양극화

- 2009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47.2%에 불과. 구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 이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이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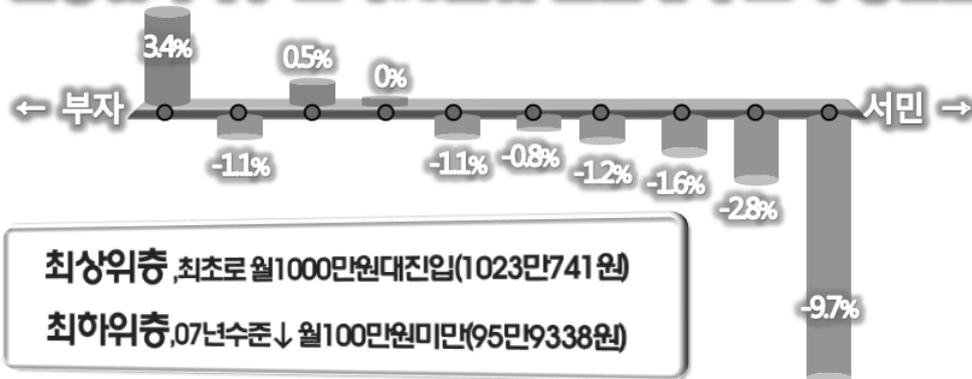
〈정규직-비정규직의 년도별 임금추이〉



〈자료〉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 2009년 3/4분기 가계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 10분위 최상위층 소득이 최초로 월 1000만원 대에 진입한 반면에 최하위층은 2007년 수준인 96만원에 머물렀음.
- 2008년 소득10분위 배율은 4.73배로 OECD회원국 중에서 소득격차 심각(OECD 평균 4.16, 터키 6.5)
- 소득10분위별로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금융위기이후 소득10분위 전년대비 소득 증감률



〈자료〉 통계청

II. 중점 개선과제

1. 양극화 해소

□ 사회안전망 확대

-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69%만이 가입해 있으며 취업자기준으로는 절반에 못미치는 47%만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현황(2008년 기준, 단위 : 천명, %)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소계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소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3,577	9,807	2,590	11,180	16,206	2,436	2,590	11,180	7,371	5,970	1,401
100.0	41.6	11.0	47.4	100.0	15.0	16.0	69.0	100.0	80.9	19.0

〈자료〉 노동연구원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직업훈련과 연계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훈련연장급여 확대 실시(구직급여 연장 효과)

□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확대

- 집단상담, 심층상담, 구인개척,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서비스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의 고용보험 중심의 고용정책으로는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음
- 고용서비스와 연계된 직업훈련 제공으로 고용서비스, 훈련, 일자리가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2. 저출산 고령화

□ 저출산 해소 위한 보육지원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008년 기준 시설의 5.5%, 아동수 대비 11%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소한 아동수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체제 정립
- 일가정 양립 위한 직장근로자의 보육지원 확대
- 육아 보육시간 확보를 위한 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되 임금차별을 방지하고 4대보험 적용을 의무화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연장

- 60세 정년 법제화로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보험 기여기간 연장(일본은 정년 65세 법제화)
-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연공급을 직무숙련급으로 개편)하고 고령자에 대한 전직 지원 서비스(직업훈련 포함) 확대
- 노후 준비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급보장장치(한도 확대) 마련하고 퇴직 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역전현상 개선)

〈국가별 공무원 정년〉

구 분	대 상 국 가
정년없음	미국, 브라질의 일반직공무원
66세 이상	네델란드, 덴마크
65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60세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여성은 55세)

3. 고용창출 위한 서비스업 지원 육성

-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의 가시화에 따라 고용창출은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
- 산업구조상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제도화하여 여성노동력을 흡수하고 보육 및 가사 서비스 수요창출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2008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2.3%, OECD 평균 70.2%)
- 정규파트타임 노동의 제도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하고 능력개발훈련 확대로 고용창출
- 주요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산 업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산 업	10.9	8.7	8.4	8.2
제 조 업	4.4	3.4	3.2	3.0
건 설 업	10.1	10.5	11.1	10.7
서비스업	15.9	13.1	12.9	12.8

〈자료〉 한국은행(2009)

4.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 고려

- 현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은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범주화하고 있음
-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의 시기에는 경제정책만으로 고용문제 해결할 수 없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서비스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중개 등 정부의 노동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노동정책에서 노정 정책의 비중 축소하고 고용정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노사민정 협의 등 노조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가 주축으로 기업경영 우선하는 노동운동 분위기
- 경제위기시 임금반납, 동결, 삭감에 동의하는 노동조합은 한국적 상황
(2009.2.23 노사민정합의, 12.4 노사정합의 등)
-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노사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경영상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조회피, 압박전략이 아닌 포용전략 필요

● ●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 ● ●

김 인 철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 인 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 발제문의 주 내용

발제문은 최근경제상황, 우리경제전망, 정책대응방안을 담고 있으며 항목별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최근경제상황>

1. 2008년 11월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 영향 때문에 우리경제는 2008년 4/4분기에 -3.4%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 1/4분기 -4.2%, 2/4분기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2009년 3/4분기에 0.9% 플러스 성장하였고 4/4분기에는 6%의 높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 경기회복세의 주요인은 수출증가이었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의 급증이였다. 내수 증가도 회복세에 기여하였으나 연간 기여도를 비교하면 순수출 기여도가 4.3% 포인트임에 비하여 내수의 기여도는 0.6% 포인트에 불과하였음. 내수개선은 환율 안정과 국제유가하락 때문이라고 하였음.
3. 2008년 하반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가 확대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크게 증가시켰음.

<경제전망>

1. 세계경제는 천천히 회복될 전망이다. 개도국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 경제는 고용부진으로 늦어지고 있음.
2. 우리경제는 GDP 성장률 5%로서 회복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8% 내외 증가율로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금액기준으로는 13% 증가될 것임.

3. 우리나라 경상흑자는 2009년 427억 달러에서 2010년 16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 민간소비 5%내외, 설비투자는 환율안정으로 10% 증가, 고용은 완만하게 개선되어 실업률 3.4% (취업자 연평균 20만 명 내외 증가)유지, 물가는 2.7%를 기록할 전망.

<정책대응방안>

1. 국제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
2. G-20 정상회의를 통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
3.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기반의 구조적 확대를 도모.

II. 토론요지

1. 발제자는 거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대응방안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였음.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2.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에는 미 수입쇠고기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용산 참사사건, 정부의 환율정책 시비, Lehman Brothers 투자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 때문에 거기다가 정부의 747경제운용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200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정책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음. 그때부터 거시경제 지표들이 수출 주도형 성장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향후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의 수출대상국들이 확대재정 금융정책을 접고 출구전략을 쓰게 되면 수출이 급감함으로써 우리경제도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3. 향후 국제경제 환경은 매우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함. 유럽 발 재정위기의 불똥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있음. PIIGS(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Spain)국들이 재정파탄으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수 있음. 그리고 글로벌 확대정책의 후유증으로 고인플레이, 개도국 외채위기, 높은 실업률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 받을 수가 있음.

한편 출구전략이 지연되면 자산가격 버블이 확대될 것이고 출구전략이 성급하게 집행되면

더블딤이 초래될 딜레마 상황을 세계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임. 국제결제통화국의 금리가 낮은것을 이용한 달러캐리(dollar carry)와 엔캐리(yen carry) 투자는 금리인상 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음.

4.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집행된 주요 경제 / 복지정책 :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집행. 2009년 상반기에 총예산의 65%인 167조원을 조기에 집행.
- 은행자본 확충 펀드, 금융안정 기금 및 구조조정 기금 설치, 중소기업 신용보증 연장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킴.
-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시장형 구조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음.
- 녹색성장·서비스산업 선진화·신성장 동력 육성, R&D 투자확대 및 인적자본 확충, 공기업 선진화, 산업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지원금, 기초수급자 확대 및 지원액 증액,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빈곤층 학생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인하 및 만성질환 본인 부담을 줄였음.
- 미소금융,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5. 외국과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비교

2008년 9월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빠른 속도로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져왔고 선진국들은 확대 재정 금융정책으로 금융위기와 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조만간에 인플레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고자 선진국 및 후진국들이 합동으로 인플레이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미국의 경우, 거의 100년 만에 닥친 금융 대공황을 우려하여 세계 제1결제통화인 달러의 공급을 엄청나게 팽창시켰으며 이제는 세계 달러 인플레이를 염려하여 출구전략의 시점을 열심히 찾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실업률이 9% 수준에 있어서 대대적인 출구전략 즉, 금리급등을 초래하는 긴축정책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임. 한편 미국은 늘어만 가는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게 그들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G7 협의체제를 G20 체제로 확대시키고 금융규제로 정책방향을 잡았음.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제도개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과 채권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강력히 제안하였으며 미국의회에서도 금융시스템 감독비용 충당을 위하여 과세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Wall가 대형은행의 규모와 투자범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Volcker Rule이라 불렀음. Volcker는 전 연준의장이었던 Greenspan의 전임자로서 대마블사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Volcker의 주장은 1933년 업무분야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Glass-Steagall Act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그런데 이법은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에 의해 폐기되었음.

우리 금융당국은 Volcker Rule이 과연 의회를 통과하여 입법화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향후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하여야 함.

6.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확대 재정금융 정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를 유지하여 왔음. 이것은 MB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용하였으며 기업과 정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음.

금융위기 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과의 양국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리고 ASEAN 10국과 한중일 3국이 1200억 달러 규모의 CMIM 기금을 올해 3월에 출범시킬 것인 바, 이것은 향후 아시아 역내 금융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의식하여 금리인상을 자주 건의하였으며 그로써 정부당국과의 정책 불일치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음. 그러나 선부른 출구전략은 오히려 경기의 더불딤 현상을 자초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음.

향후 우리나라에 금융거래세가 도입될지 여부는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IMF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지 여부도 G20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막상 금융거래세를 비롯하여 미국 등이 주장하는 금융규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음. 우리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선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움.

7. 출구전략 및 더블딥 가능성 진단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즉 금리인상과 금융긴축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음.

첫째, 우리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목표인플레이를 어떤 수준에 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

둘째, 우리나라 목표실업률을 어떤 수준에 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

셋째,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과 수출경쟁국이 언제 출구전략을 쓰느냐에 달려있음. 우리의 수출 대상국이 출구전략을 시도하면 우리의 수출은 감소할 것인데 이때 우리도 출구전략을 쓰면 우리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어 더블딥을 당면하게 될 것임. 만일 우리의 수출경쟁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동일한 경제여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출구전략을 쓸 수 있음.

8. 사회안전망 정책의 평가와 보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철학과 경제원칙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서 복지정책이 산발적이고 임기응변의 성격이 많았음. 그래서 귀중한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세상에 공짜는 없다.”등의 경제철학이 좀더 강조되어야 함.

연령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임.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의 95% 이상인 중소기업(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건설회사, IT관련 회사 등)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 중소기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 필요함.



경제관련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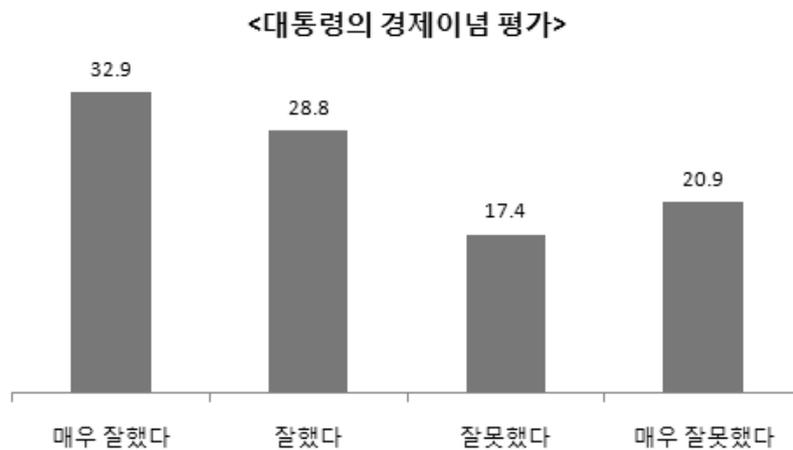
<별첨> 경제관련 여론조사 결과

□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

○ 2010년 02월 18일(목) / ARS / 전국 2,194명 응답 / SPSS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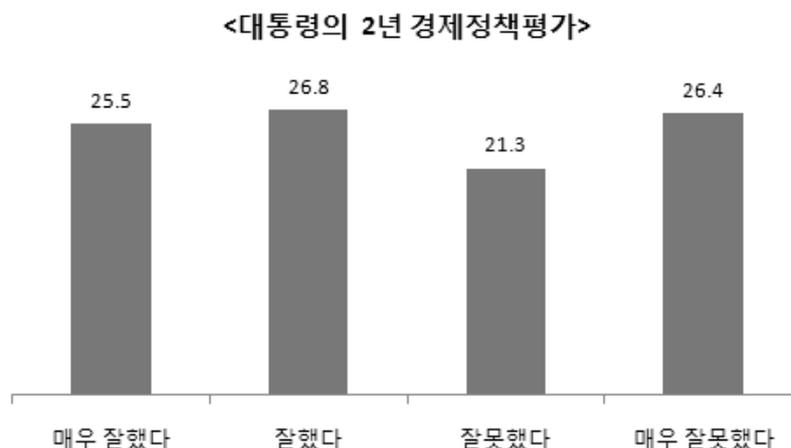
문 1»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이라는 가치를 제시하였는데, 경제회복의 방법으로 중도실용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편) 61.7% vs (잘 못한 편) 38.3%



문 2» 지난 2년동안 대통령이 시행해 왔던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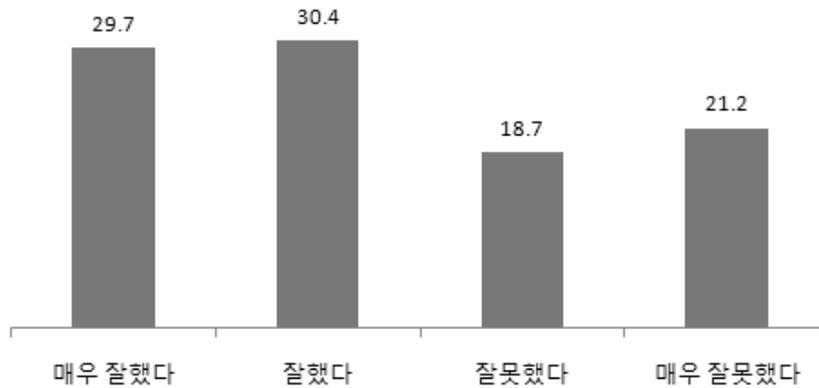
(잘한 편) 52.3% vs (잘 못한 편) 47.7%



문 3»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대통령이 보여 준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편) 60.1% vs (잘 못한 편)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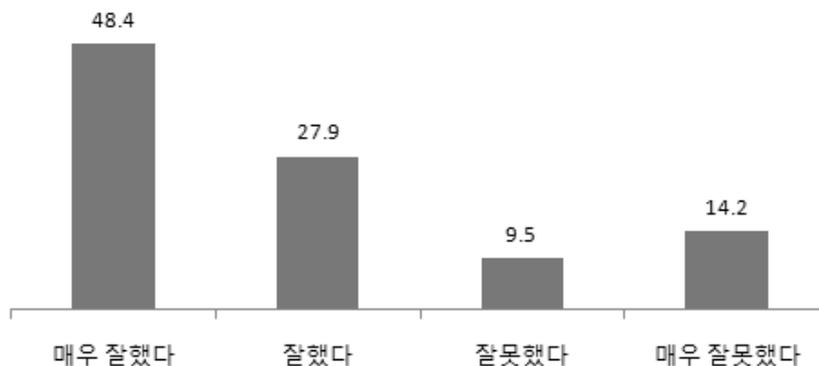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노력 평가>



문 4»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건설계약을 성사시키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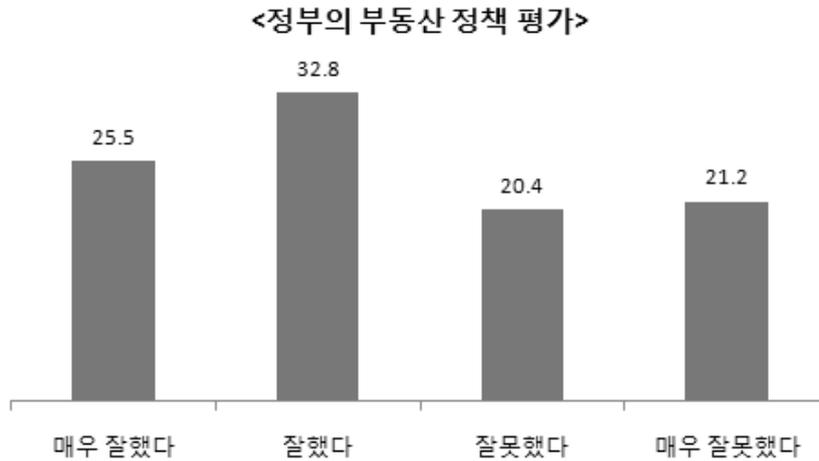
(잘한 편) 76.3% vs (잘 못한 편) 23.7%

<대통령의 경제외교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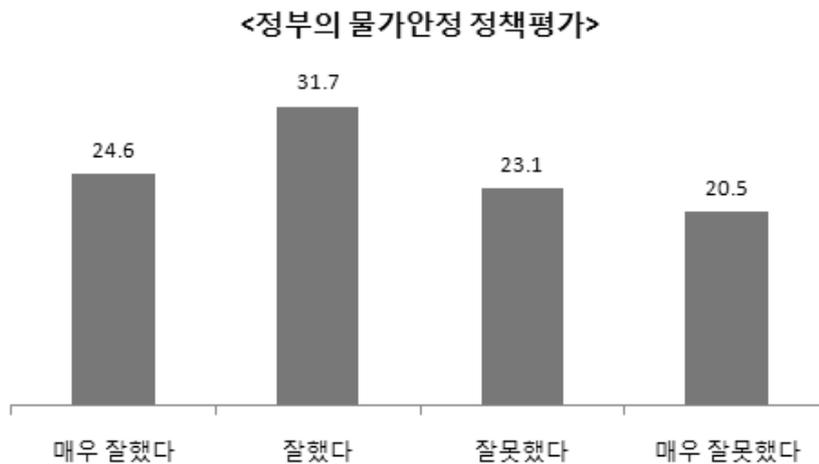
문 5» 지난 한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양도세 감면혜택 강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감면’, ‘보금자리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편) 58.3% vs (잘 못한 편)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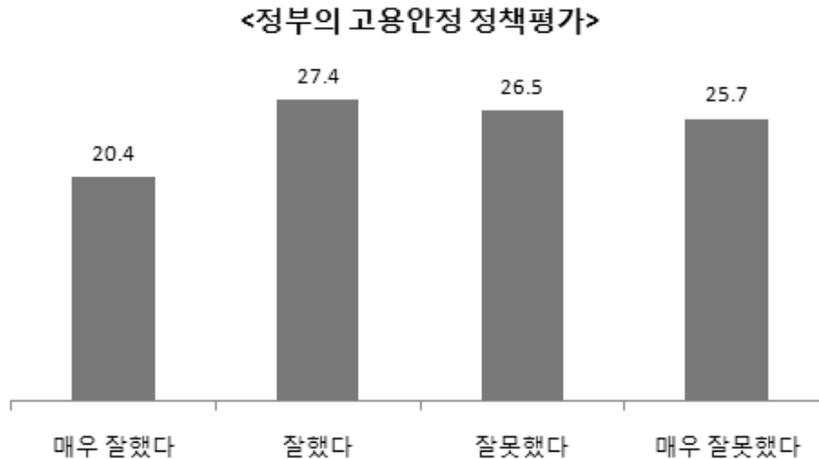
문 6» 지난 한해 서민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주요 생필품 물가관리’ 등과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편) 56.3% vs (잘 못한 편)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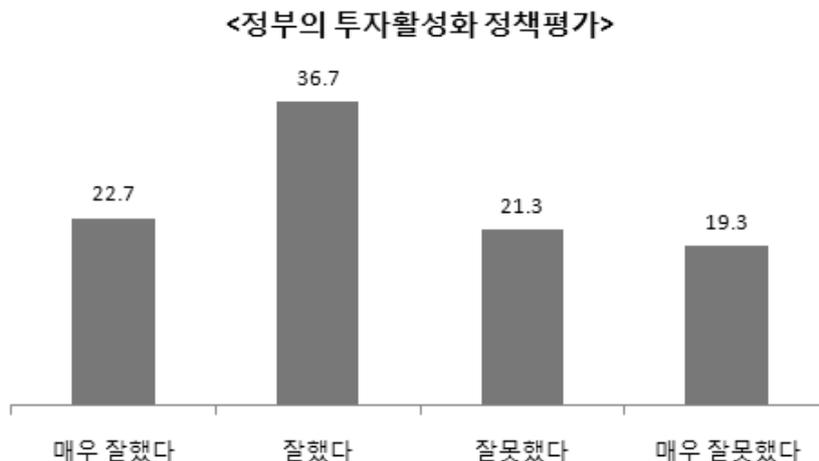
문 7» 지난 한해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 ‘청년 인턴제 도입’ ‘희망공공근로 확대’ 등 고용안정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편) 47.8% vs (잘 못한 편) 52.2%



문 8» 지난 한해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투자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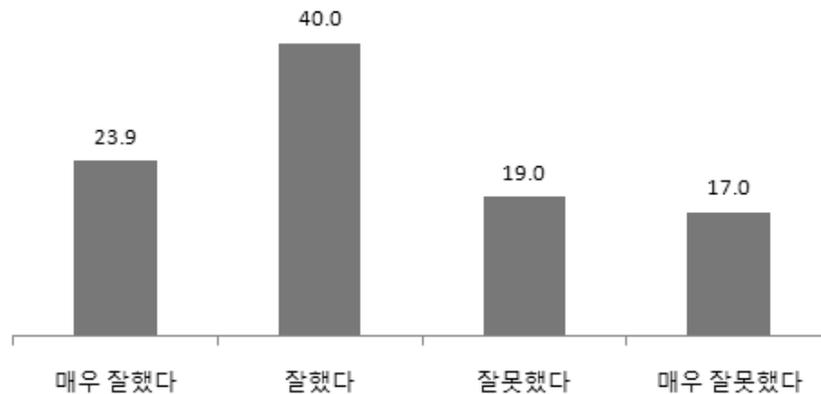
(잘한 편) 59.4% vs (잘 못한 편) 40.6%



문 9» 지난 한해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근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편) 64.0% vs (잘 못한 편)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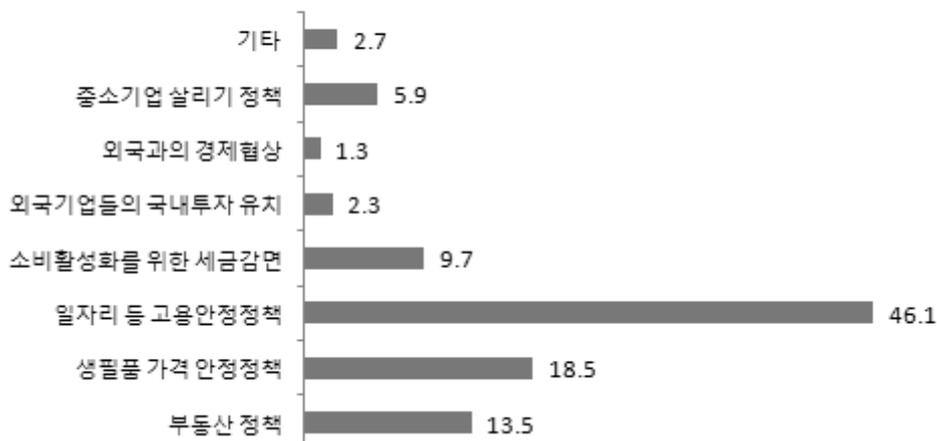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문 10»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일자리 등 고용안정 정책(46.1%)
- ▶ 생필품 가격 안정정책(18.5%)
- ▶ 부동산 정책(13.5%)
- ▶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9.7%)
- ▶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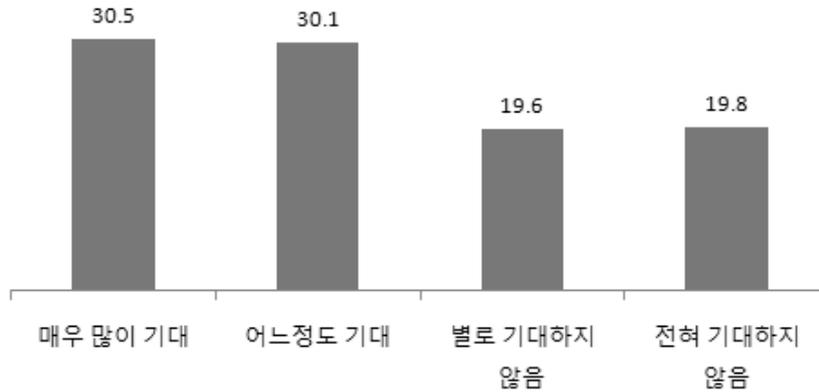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순위>



문 11» 선생님께서는 2010년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하는 편) 60.6% vs (기대하지 않는 편)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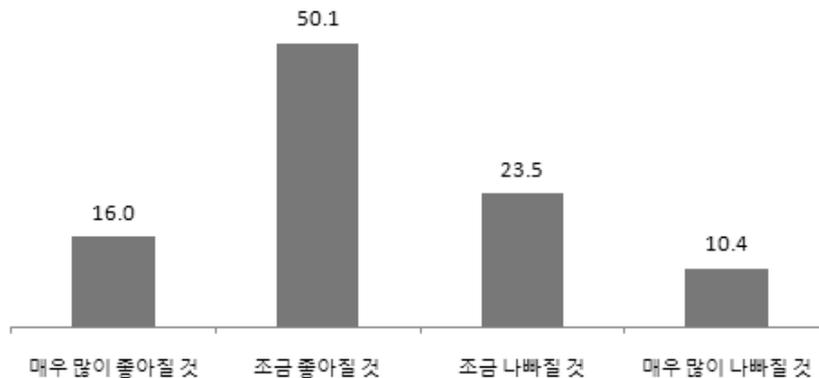
<경제위기 극복관련 대통령에 대한 기대>



문 12» 2010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이다) 66.1% vs (나빠질 것이다) 33.9%

<2010년 경제상황 전망>



문 13» 현재 개인 경제상황이 국제 금융위기 발생했던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이십니까?

(좋아진 편) 32.4% (변화가 없다) 42.0% (나빠진 편) 25.5%

